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해법 제시

동승동칼럼
새마을 운동이 지구촌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기획특집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해법 제시

시사포커스5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 활성화 실상은 빗덩이?



© Global Goals



22살이 가장 갖고 싶은 전통 스쿠터

15살이 가장 갖고 싶은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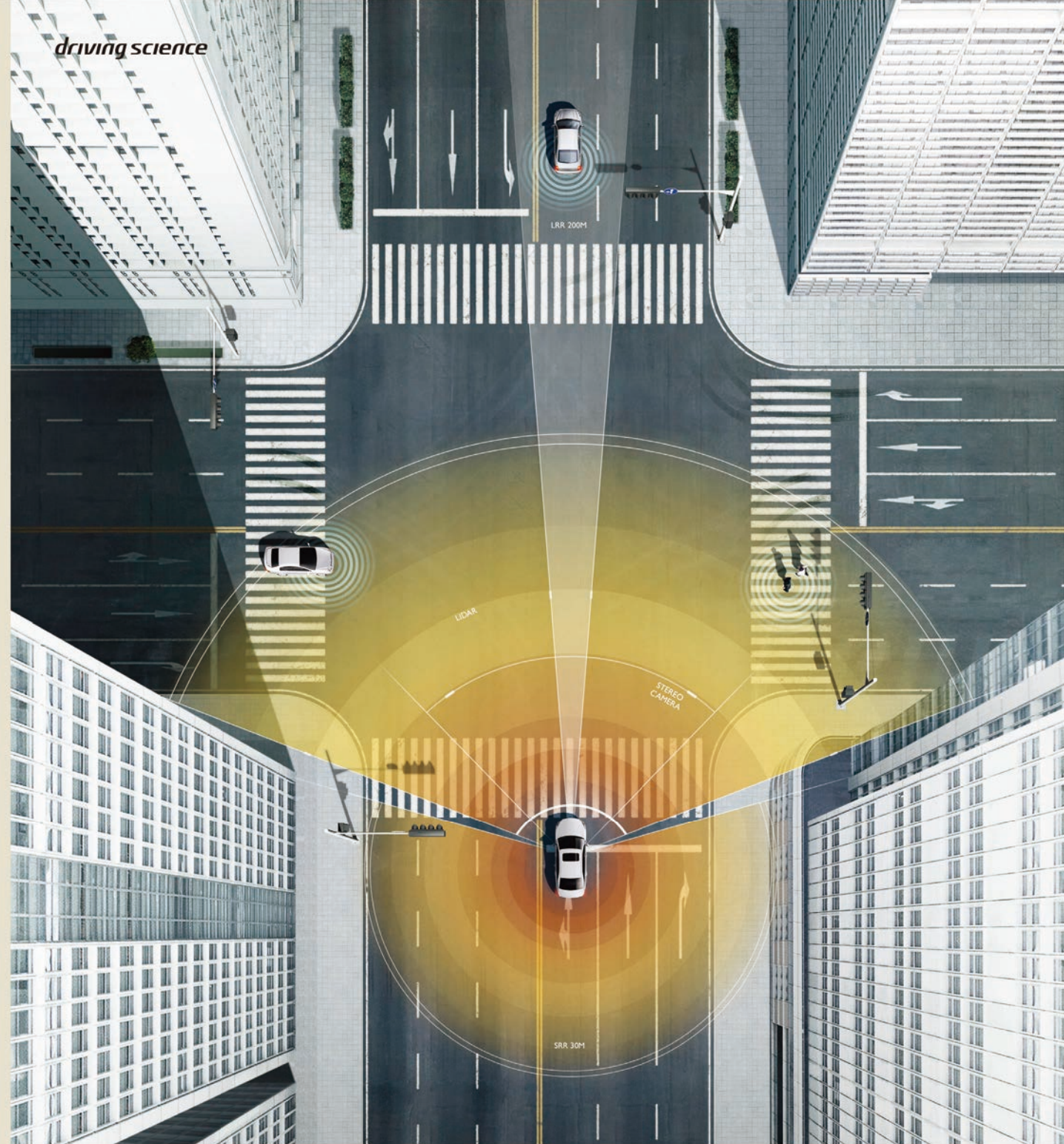
30살이 가장 갖고 싶은 전기차

7살이 가장 갖고 싶은 장난감

46살이 가장 갖고 싶은 친환경 주택

당신이 꿈꾸는 것, 모두 화학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제품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당신의 앞선 인생과 함께합니다



교차로의 숨은 위험, 이렇게 다 보인다면 안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봐야 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 교차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현대모비스 [교차로 충돌방지 시스템] 이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과학, 현대모비스



대한민국 경제를 알차게 키워내는 강한은행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핀테크로 국민의 금융생활을 스마트하게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리의 금융영토를 더 넓게
우리은행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힘을 다져가겠습니다

강한은행 우리은행

강한은행 우리은행이 만드는 3강 1. 생애 주기별 상품으로 서민경제를 더 강하게! 2. 신뢰 받는 기술금융으로 창조경제를 더 강하게! 3. 원스탑 금융 솔루션으로 금융체질을 더 강하게!

속쓰림, 신물, 더부룩한 속엔 **겔포스엠**

위장병 잡혀어!



한국인의 특허위장케어 겔포스엠

커버스토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해법제시

경실련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주제별 연속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6개 관련 정부부처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지구적 기준에 맞춘 진정한 지속가능사회의 발걸음에 함께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해법 제시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태룡 정책위원장 서순탁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김한기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남은경 윤철한 오세형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송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5년 10월 12일 발행

CCEJ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Jongn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동승동칼럼

08 새마을 운동이 지구촌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 고계현

기획특집

- 11 ① UN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해법 제시 / 이수련
- 17 ② 인터넷전문은행 전문가 설문결과 / 최예지
- 20 ③ 면세점을 이용하면 재벌에게 어떠한 특혜가 갈까? / 권오인

시사포커스

- 24 ① 고위급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는? / 정은영
- 28 ② 업체별 GMO 수입현황은 공개될 것인가 / 박지호
- 31 ③ 시민의 재산을 포기하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 강행 / 최승섭
- 35 ④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개혁인가? 계약인가? / 정택수
- 39 ⑤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 활성화 실상은 빗덩이? / 윤은주
- 41 ⑥ 부패공화국 오명 벗자는데...부정부패에 눈 감자고? / 김삼수

통일마당

44 통일대박? 말은 무성하는데 북한학과는 달랑 2개 / 전영선

경실련 이야기

50 새로운 이, 함께 새로 쓰는 경실련 / 정유림

지역이야기

- 52 ① 단수(斷水) 사태로 드러난 청주시의 민낯 / 이병관
- 54 ② 공공개혁 하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멈춰야 한다 / 정재욱



11 기획특집1
UN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해법 제시



39 시사포커스5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활성화 실상은 빗덩이

안녕하세요? 회원님!

58 [인터뷰] 박윤수 회원
"서민들이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게 힘써주세요" / 오세형

문화산책

60 지금, 다시, 데미안 / 박지호

동승동 책방골목

- 62 도시화율 90%!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시 입문서 / 오세형
- 63 "통일을 왜 해야하죠?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 홍명근

인턴후기

64 2개월간의 경실련 인턴 생활을 마치며 / 백승혁

편집자에게

68 데스크(Desk)가 데스크(Desk)에게 / 오세형

회원게시판

69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70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73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2 지역이야기1
단수(斷水) 사태로 드러난 청주시의 민낯



60 문화산책
지금, 다시, 데미안



새마을 운동이 지구촌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 시작된 유엔의 개발정상 회의에 참석하여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주도하며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안하였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 산불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들이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하

는 국제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번 개발정상회의는 유엔이 지구촌 빈곤추방을 위해 올 2015년까지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MDG) 다음으로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결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발언은 사전예고 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국내에서 조차 새마을 운동은 적실성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나름의 국제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조나 방향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들은 밀어 붙이기식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갖게 한다.

70년대 농촌개발프로그램인 새마을 운동은 분명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우리 농촌을 잘살게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 농촌의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농촌은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농촌은 노인촌이 되었고 60대가 청년 역할을 한지 오래다. 젊은이가 농사라도 하려면 수익은 고사하고 부채에 허덕이는 것이 다반사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현재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압축적인 경제성장도 새마을 운동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도 약하고 객관적인 연구도 없다.

새마을 운동이 지구촌개발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 측면과 함께 그 속성도 살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단과 방식이 적절 했는가의 문제이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국가 동원 체제의 산물이다. 농촌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 측면에서 변해야 하는 대상으로 삼아 인권과 민주주의, 협치는 부재한 채 국가의 강제력으로 이를 통제하여 진행했다. 물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발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들에게 이러한 방식이 유의미하고 따라 배우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긍정성을 불러 올 수 있다. 개도국의 다양한 문화나 역사 그리고 정치체제의 고려 없이 한국적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자세이고 독선일 뿐이다.

장기적인 비전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으로 제시되는 국제개발의 기조는 새마을 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 모델로서 생명력이 있을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론'이 국제개발 분야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용어 조차도 사라지고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순수한 개발협력의 동기 보다는 박정희-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새마을 운동에 대해 지금은 너도나도 동참하는 듯 보이지만 3년 후 다음 정권에서는 '녹색성장론'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개발 레짐은 원조 수혜자의 자주성과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관의 협치라는 보편적 가치아래 수혜국인 개도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정치사회체제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인 계획 하에 새마을 사업에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와 부정성을 제거한 사업 방향과 내용 정립,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개도국 현지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 전문학자가 서로 선순환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우선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함께 개발협력에 열정을 가지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개도국에 대한 이해 없이, 방향과 기조의 분명함 없이, 전문인력도 조성하지 않은 채, 홍보에 치중하며 예산규모와 사업 확장만 꾀한다면 결코 개도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새마을 운동은 잠시 지나가는 유행에 불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재정적자 속에 예산의 낭비 혹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명확한 기조와 투명한 준비, 계획을 통해 개도국 중심의 자주적인 개발모델에 근거하여 국제개발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부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의도된 계획이라면 그 의도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UN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해법 제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제출

이수련 국제팀 간사
srlee0326@ccej.or.kr

올해 9월 UN총회에서는 MDGs에 이은 향후 15년간(2016년~2030년)의 보편적 국제사회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가 발표되었다. 해당 목표는 지난 2000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정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하 MDGs)가 올해를 연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사회 목표로 등장하였다.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으며, 주제별로 크게 ‘포괄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으로 분류된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UN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수준의 이행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SDGs 국내 이행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제별 연속토론회를 열고, 국내 시민사회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지난 8월 19일 SDGs 16개 목표(목표 17 글로벌 파트너십 제외)의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인 6개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LH공사)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 경실련의 입장을 주제별(경제, 사회, 환경, 이행기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노동, 인프라, 불평등의 목표가 포함된 경제성장 분야 SDGs는 지속가능하고 전 세계의 포괄적 경제성장을 지향한다.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사회의 소득불평등 심화, 청년고용 문제, 민간투자 위주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 제도 개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의 공공투자 증진 및 민간투자 제도적 정비를 경제분야 SDGs의 최우선 국내 이행 과제로 제안한다.

둘째, 빈곤, 보건, 교육, 성, 거주의 목표가 포함된 사회발전 분야 SDGs는 인간중심적이고 포용적 사회발전을 추구한다. 국내 사회의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 및 보건의료문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기초서비스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노인 빈곤을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 강화, 고령층 보건의료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정주계획 및 관리 확대를 사회 분야 SDGs의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셋째, 환경 분야 SDGs는 물, 에너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자원, 육상생태계 목표를 포함하며 미래 세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국내 사회의 전지구적 가치 실천을 위해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수준, 개발 중심의 국가정책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향후 이행과제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에너지 수요관리 후방예측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보전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환경분야 SDGs의 최우선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넷째, SDGs의 실질적 이행과 추진의 내용을 담은 이행기제 분야 SDGs는 평화로운 사회와 신뢰 있는 제도 구현을 지향한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반부패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법치의 실현기제로서의 사법 제도의 개혁,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투명화, 정보 공개의 폭과 범위 확대를 이행 기제 분야 SDGs의 최우선 국내 이행과제로 제안한다.

이 밖에 SDGs 각각의 목표에 대한 국내 수립 방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목표	국내 목표수립을 위한 방향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급여 :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노인 빈곤을 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강화 ▶ 근로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지속가능성 대책 마련 없는 FTA 및 TPP 등 농산물시장 개방 신중 ▶ 농가소득 보전으로 식량생산의 지속성 보장 ▶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 ▶ 영농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대책 추진

	목표	국내 목표수립을 위한 방향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층 보건의료문제 해결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 마련 ▶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확립 ▶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및 방과 후 돌봄 제공 ▶ 의무교육 수준으로 고교 공공 지원 확대 ▶ 불법체류자 자녀 취학 보장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해 교육 제공 ▶ 대학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지원 ▶ 초중등 진로교육-직업교육-평생 직업교육의 연계체계 확립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성 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정책을 통합적인 폭력방지정책으로 조정 ▶ 공식경제영역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전환 ▶ 재생산과 돌봄 경제영역에 대한 가치인정 ▶ 장기과제로써의 성 격차 해소전략 모색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 제정 ▶ 상수도 요금의 주민 자부담을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협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7	지불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지향적인 접근과 전방예측을 벗어나 수요관리 중심적이며 후방예측적 접근으로 패러다임 전환 ▶ 원가회수를 넘어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전력요금 인상 ▶ 전력과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 명확히 제시 및 이행방안 구체화 ▶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FIT 부활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민참여적 이익공유체계 도입 ▶ 에너지정책과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공청회의 실질화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 ▶ 질 높은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현실화 ▶ 청년 실업률의 감소 ▶ 안정적인 근로환경 형성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보수 및 시스템 개선 ▶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전략 채택 ▶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증진 ▶ 공공투자 증진 및 민간투자 제도적 정비 ▶ 환경기술 영역에서의 정책적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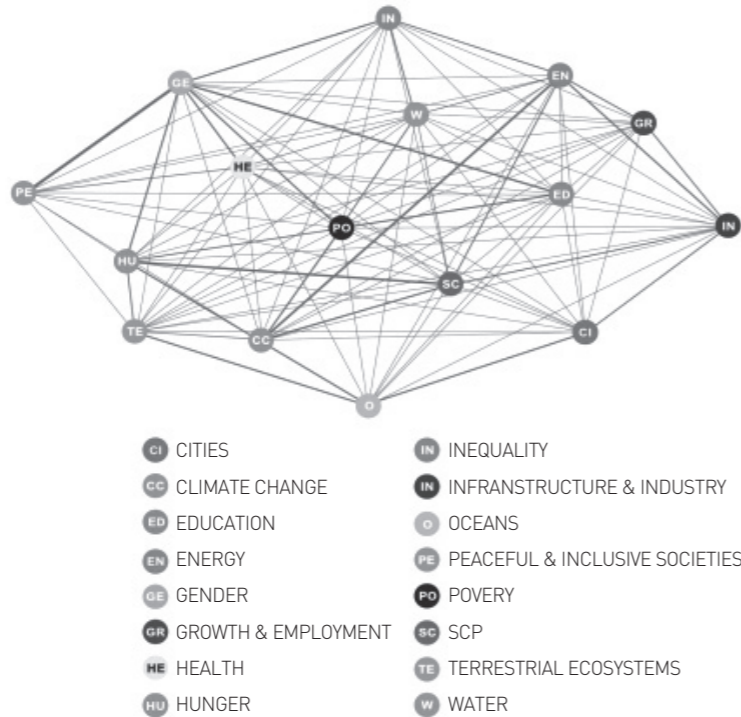
	목표	국내 목표수립을 위한 방향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제도 개선 ▶ 한국 금융시장 발전전략의 재검토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정주계획 및 관리 확대 ▶ 취약계층(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와 안전하고 저렴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 대기질과 폐기물 등 도시인구 1인당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 축소 ▶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 확대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폐기물 2010년 기준 반으로 감소 ▶ 생애주기에 기반한 친환경생산과정 기준과 인증절차를 2020년까지 확립 ▶ 친환경기술 인증제도를 확립하여 표기하고, 유전체변형식품(GMOs)에 대한 표시 강화 ▶ 약품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모든 생산품에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과 중간과정 및 최종과정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명시를 통한 안정성 강화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에 대한 초·중·고 교육과정 도입 의무화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감축 목표의 재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 ▶ 2030년 INDC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및 감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평가 및 환류 ▶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한 자원 기여 선언의 충실한 이행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효과 확대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중심의 국가운영 체계를 보전 관리 중심으로 전환 ▶ 통합과 조정의 거버넌스 정착 ▶ 공유수면 독점적 사유화 방지 ▶ 해양보호구역 제도 실효성 확보 ▶ 해양생태계 위협생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 ▶ 지식기반 해양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강화
15	육상 생태계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원,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 폐기 및 보호구역 훼손방지 대책 마련 ▶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주요 산림 훼손 구간 복원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충해 관리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률 축소의 구체적 지표 마련과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 법치의 실현기제로서의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 ▶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투명화 ▶ 정보 공개의 폭과 범위 확대 ▶ 각 문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실현에 적합한 제도 모색 필요



▲ 17개 목표로 이루어진 SDGs © Global Goals

SDGs는 전 세계 모든 UN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표현과 특정 나라에만 적용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유엔은 SDGs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9월 UN 총회에서 SDGs가 발표되고 1년 후인 2016년 말까지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는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미로 SDGs를 재해석하고 국내 이행에 대한 방안을 종합했다는 점과 정부가 SDGs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전, 시민사회의 의견을 사전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견서는 각 목표별로 다섯 개 내외의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각 목표에 대한 개선 방향이 어느 한 목표에만 국한되는 과제가 아닌 중첩되는 크로스커팅(cross-cutting)이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의 국내 달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국내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는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연계된다. 또한, 목표 2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육성 및 기술개발'이 제안되었다. 이는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즉, SDGs는 17개 개별 목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목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따로 또 하나의' 목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연결 구조를 시각화한 그림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SDGs 목표 간 연계 구조

출처 :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5, United Nations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SDGs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며 개별 부처의 이행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기구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 단독으로 여러 정부 부처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할 수 없는 점,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이상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격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변경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UN은 SDGs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한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목표에 합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자연을 포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전문가 설문결과

경실련 설문결과, 전문가 71%(61명)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50% 지분보유 부적절”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서 '일단 GO!'를 외쳤다. 지난 9월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 계획, 사업 계획 등의 항목으로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수) ~ 10월 1일 (목) 이틀간 인가신청을 받았고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제 평가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은산분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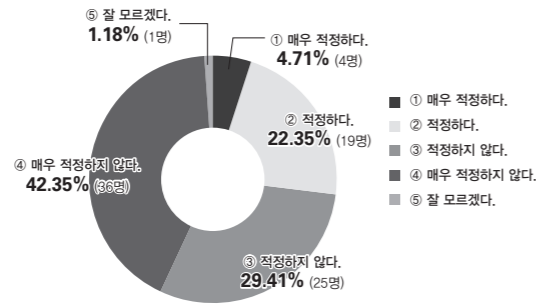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 발표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분 소유한도 제한 즉 '은산분리' 문제는 현행대로 은행법을 준수하여 인가를 진행한다. 현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소유한도가 4%이지만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로 은행법이 바뀌면 바로 소유지분을 5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특정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경실련이 지난 8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관련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문가의 71%(61명)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부적절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지분 보유 한도 확대에 의해 중견재벌의 사금고 전략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따라서 현행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을 이뤘다. 이런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지분을 파격적으로 50% 보유하도록 허용하여 혁신적 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방침이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1)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를 초과 소유 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15%)

산업자본이 혁신적 사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산업자본에 대한 과도한 맹신이다. 산업자본이 추진해온 금융 사업의 결과를 보자. 재벌 계열의 증권·보험·자산운용 회사들 중에 현재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은 하나도 없다. 또한 외환위기를 자초했던 종금사나 신용카드 사태 등 기업의 금융 사업은 늘 경제의 불안요소였다. 최근의 동양증권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표1〉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소유한도 50% 확대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은 규제가 과도하게 느슨하다.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취득하면서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로서 감독 규

제를 받게 된다.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25% 까지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는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의결권의 5% 이상 소유한 자는 금융청장에게 보고하고,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회사의 사금고화 방지,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사업 리스크 차단 등 사후적 통제를 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그 어떠한 사후적 통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방안의 허점도 존재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한다. 만약 3조원의 자본을 가진 A기업이 은행을 설립 후 성장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면 은행의 인가를 취소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정책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 동일인 유무 해석 부분

소유구조에 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한 기업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회사가 합작해서 신청했다.

이때 동일인 여부 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컨소시엄 내에 한명이라도 산업자본이 있다면 산업자본으로 볼지 말지의 심사이다. 동일인은 친척, 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을 의미하고 합의,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동일인은 산업자본이 지분을 쪼개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A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 A자 동차 4%, A전자 4%, A카드 4%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들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전체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할 수 있다.

이전의 예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우리은행 인수 당시 우리금융은 우리사주 조합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금융을 인수하려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다는 것은 주주간 협의가 있다는 명시적 경우든 암묵적인 경우든 공동행위로 본다”며 “컨소시엄 구성원을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발언을 뒤집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컨소시엄 참여자 간 유무형의 계약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권 약정 유무를 살펴 동일인 인지 아닌지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유구조 내용만 가지고도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있다.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보자’식의 추진이 아니라 천천히 살피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사업성, 경제적 효과, 소비자가 얻을 이익 등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없다. 급할 게 없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경실련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경우 얻게 될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중국 경제 위기, 미국 금리 인상의 우려 등 대내외적 금융리스크가 많다. 이럴 때 일 수로 성급하게 은행 설립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은행이 위협해지면 온 국민의 지갑이 위협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면세점을 이용하면 재벌에게 어떠한 특혜가 갈까?

재벌 특혜 면세점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 © Shutterstock

관세청은 지난 7월 서울·제주지역 추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어, 9월 말에는 특허만료가 끝나는 서울 및 부산 4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시내 면세점 사업은 관련 매출액 대비 0.05%라는 소액의 특허수수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재벌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재벌 면세점 사업자들이 어떠한 특혜를 누리는지 살펴보자.

정부가 독과점 특혜 부여

면세점 사업은 관세법에서 규정한다. 관세법을 보면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사업권을 절차에 따라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돈 만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면세점 사업권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여 자연스럽게 독과점 시장을 형성시킨다. 2014년 서울지역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호텔롯데 60.5%, 호텔신라 26.5%로 2개사만 87% 이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국회

에 보고한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8조3천억원 중 대기업 면세점이 7조3천억원 정도로 8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재벌 독점이윤에도 특허수수료는 0.05%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7조3천억원 정도였다면, 특허수수료 수입은 약 36억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2014년 면세사업 수입은 3조9천억원 정도이다. 호텔신라는 면세유통 매출이 2조6천억원 가량에 영업이익이 1,490억원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관세법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 매출대비 0.05%, 중견 및 중소기업이 0.01%에 불과하다. 정부의 독과점 형성과 함께, 턱없이 낮은 수수료는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국내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면세점 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이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83.74%에 해당한다. 면세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99%의 일본계 주주에게 배당된다. 호텔롯데의 배당금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50억원이다. 이로 인해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표1〉 전국 면세점 매출액

(단위 : 억 원, %)

구분	'13년	'14년	
	매출액(비중)	매출액(비중)	(전년대비증가율)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60,221(88.1)	73,397(88.3)	(21.9)
중소·중견기업	2,534 (3.7)	4,010 (4.8)	(58.3)
공기업	5,571 (8.2)	5,669 (6.8)	(1.8)
계	68,326(100.0)	83,077(100.0)	(21.6)

※ 보세판매장특허수 : ('13년) 40개 → ('14년) 43개

자료 : 기획재정부

면세점사업자의 낮은 기부문화

호텔롯데는 2014년 매출액이 4조1천4백억 정도 올렸으나, 기부금은 27억원

정도에 불과해 매출액 대비 0.07% 수준이다. 호텔신라는 기부금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의 특혜를 입어 막대한 독점이윤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지는 약하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보일 때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 모집이나, 기존 특허수수료가 만료되어 추가 승인을 받는 시점이다. 사업자 선정기준의 사회공헌 분야 배점이 150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점이윤을 공시도 하지 않는 특혜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므로,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가 별도로 공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세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한 매출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보고하는 수준도 사업자별 매출이 아닌, 규모별·유형별이라는 큰 틀의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고 있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리고, 이익을 낮게 계상하는 회계상 조작의 개연성이 크다.

면세점 사업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서울 및 제주지역 추가 시내면세점 모집 시에도 제도개선 없는 재벌 특혜사업을 중단할 것을 관세청에 촉구하였다. 관세청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대로 강행했고, 그 결과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의 대기업 사업자들이 선정되었다. 입찰 참가자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비공개 처분 결정이 났다. 면세점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스스로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의원들에게 입법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가격경쟁(경매제도)이 독점이윤을 축소하고, 사업권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선정방식


인천공항면세점은 입찰하한선을 주고, 최고가를 써내는 방식의 가격경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시내면세점은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점을 매겨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소액의 특허수수료만 받는다. 면세점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

질로 세입의 원인이 된다. 세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에 따라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턱없이 낮은 수수료 방식으로는 독점이윤만 키워줄 뿐이다.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하고, 독점이윤을 축소시키는 방식은 인천공항면세점사업과 같이 입찰하한선을 주고, 최고가 가격경쟁을 시키는 방식이다. 국회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독과점 방지는 필수, 재무제표 별도공시는 당연

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만 해도 시장의 8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3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여 관리·감독을 한다. 면세점 대기업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면세점 사업의 경우 관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독과점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된 주파수의 할당을 규정하는 전파법의 시행령에는 전파자원 독과점 방지조항이 있다. 면세점 사업 역시 한정된 자원을 국가가 배분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면 된다.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 같은 대기업들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실련과 입법 논의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발의하였다. 면세점 사업은 막대한 매출과 이윤이 발생함에도 공시제도가 없어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재무적 성과에 대해 별도로 공시하는 제도는 당연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면세점 사업을 통해 성장한 롯데그룹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사업제도 개선 없이는 또 다시 재벌들에게 향후 수년간 독점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라도 관세법의 재벌 특혜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경제특집

2015년 9. 10월호

고위급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는?

정은영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3학년 학생
endgg@daum.net



지난 8월 25일 무박 4일간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2일 <고위급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은영 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이 열린좌담회 현장을 스케치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기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열린좌담회 첫 시작은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이번 고위급회담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대화로 풀어나간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긴장 관

계가 항구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어떠한 대외 선전용 도발이 있을지 긴장태세를 낮추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지만 공동보도문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이번 회담이 남북한의 파국을 막는 일회용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한이 43시간의 협상으로 돌연 ‘교류협력’의 관계로 돌아선 것을 통해 정부 기조 변화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했다. 한 번의 협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남북관계라면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또한 5·24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남한이 북한이 원하는 경제교류와 협력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가름하는 핵심이 될 것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확성기를 틀면 김정은도 불러낼 수 있다.

안찬일(사)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8·25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국정운영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

간 중 도발, 중국 전승절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무리수를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 신속한 군사적 대응체제를 갖추었으며, 중국은 전승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안찬일 소장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대북 심리전이 상당히 효과적인 비대칭무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확립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위기 해소와 경협재개 필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고위급접촉 합의 결과인 민간교류 활성화와 당국 회담 개최가 결국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더불어 5·24 조치 해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5·24 조치는 유감표명(+a) 방식으로 경협 및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우회적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위원은 군사위기 해소와 더불어 경

협 재개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존 남북합의의 포괄적 재검토와 전면적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운영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등 조치의 적극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또는 북한 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한 전략적 도발 감행 여부가 고비일 것으로 판단했다.

서주석 연구위원은 아울러 대내외적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성격 등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금강산 재개와 관련하여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로 무엇을 요구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군사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신뢰구축 회담 정례화 문제 등을 제시했다.



당국회담은 여전히 제한적, 유보적이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당국이 평화적 회담을 개최·성사 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전반적인 평화 공

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북측이 데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뒤늦게 협상에 나선 점,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힘겨루기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점, 협상의 성과가 제도화될 여지가 있는지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북한이 10월 10일을 전후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지를 매우 좁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기회로 대북 강경책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달 간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협상이 5·24 제재를 사실상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게 방향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을 촉구하되 6·15와 10·4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합의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여 6자회담 재개나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의 치킨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토론은 ‘한반도, 2015년 여름(은 얼마나 위험했고, 가을은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나?)’의 토론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이 교수는 “이번 남북기본합의서가 위반된, 북한 지뢰‘도발’과 남한 확성기방송 대응은 남북한 체제에 대한 적대 의식이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미군, 특히 육군의 국방개혁이 미루어지는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불안정한 상황에 정권의 독자적이고 현실적인 북핵문제의 해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과잉대응을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한국이 미국 뒷자리에서 난폭운전을 조장하는 것에 현 상황을 비유했다. 이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중국 역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인 저주가 걸린 동맹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남북의 대립과 협상의 극적인 드라마에서 역으로 끌려 다닌 상화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번 남북 대립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위험한 전쟁 시나리오에 한반도 하나가 남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각성이나 구조적인 인식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서면서 6자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만 가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결국 남북 당국이 주도적

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체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걸려있으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일종의 치킨게임 반복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향후 정상회담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동력이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감을 표명했다.

유감-사과 프레임은 깨지기 쉽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북한문제-통일문제’가 대통령의 독자적 고유영역으로 국민적 합의가 미비한 한계를 언급했다. 이번 합의 역시 통일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번 합의문이 유감-사과라는 비정상적인 프레임으로 남아 오히려 향후 다양한 북한의 군사도발 변수로 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박 교수는 보다 외교적 관점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중협력으로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순항하지 않을까 전망했다. 또한 ‘대화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유지된다면, 발전적이고, 전략적 남북관계의 공간이 확장된 것으로 평가했다.

박인휘 교수의 토론을 끝으로 좌담회는 뜨거운 막을 내렸습니다. 긴장과 합의를 반복하는 남북관계에 이번 합의가 어떻게 발전하여 어떤 시금석이 될지,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15년 9월 10일

2015년 9월 10일

업체별 GMO 수입현황은 공개될 것인가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 미국에서도 GMO 표시제를 위한 소비자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을 두둔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GMO 앞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끝없는 요구와 소송 끝에 정부가 감추려했던 GMO 관련 정보들이 이제 곧 드러난다. 물론 아직 끝은 아니다.

업체의 영업비밀이다

2013년 3월, 식약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개월여 간 진행된 소송이 끝이 났다. 선고를 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그간 감춰왔던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의 업체별 수입현황을 공개하게 됐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원한다.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식약처만 업체의 이익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GMO표시제도로 십수년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식약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경실련은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이의신청마저 거부했다. 결국 업체별 GMO수입현황은 알 수 없었다.

경실련은 2013년 최초의 정보공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5월경 국회의원을 통해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동방향을 설정했다. 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1~2위에 달하는 GMO수입국

그 후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5월 승인되지 않은 GMO밀이 재배됐고 전 세계로 수출됐다. 우리나라에도 해당 GMO밀이 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식약처가 발 빠르게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랬지만 해당 밀이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내 대표 착유회사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가 식용 GMO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조사했지만, GMO 관련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GMO표시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식약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비자단체, 국회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계속됐지만 주요 이해

당사자인 식약처는 움직이지 않았다. GMO는 안전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고 현행 표시제도는 일부 허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은 쉽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물론 업체별 GMO수입현황과 같은 기본정보에 대한 비공개 정책도 고수했다.

영업비밀이 아니다

정보의 비공개는 3년 동안 이어졌다. 매번 거부 사유마저 동일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2015년 1월 강한 대응을 결정하고, 3월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통해 경실련은 GMO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은 영업비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1〉 업체별 최근 3년간 식용 GMO 수입현황 (2010 ~ 2012)

(단위 : 건, 톤, 천 달러)

업체명	품목	수입내역			
		건수	중량	금액	
CJ제일제당	대두	139	1,165,807	63%	865,766
(주)사조해표	대두	109	929,605	35%	484,233
대상	옥수수	60	1,360,476	45%	441,276
합계		308	3,955,888	69%	1,791,275

최근 3년간 전체 식용 GMO 대두 수입량 2,655,000톤, 옥수수 수입량 3,052,000톤

(자료 : 식약처)

무엇보다 해당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곧 소비자의 안심 나아가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식약처가 자신들의 업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영업비밀이다. 하지만

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소비자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식약처는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경실련은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업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주장했다. 식약처는 재무제표에 나온 지표로는 볼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했다. 식약처의 역할이 의심됐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에 집중했다. 결국 8월 28일 소비자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별 GMO수입현황은 영업·영업상 비밀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직결될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원은 지극한 당연한 논리와 이야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했다. 업체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봐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당연한 것을 식약처만 모르고 있는 형세다. 한 시민의 냉소 섞인 댓글이 현재 상황을 직시하게 한다.

“이런 건 식약처가 소송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 아닌가? 어찌 반대로 됐나?”

소송은 다시 시작된다

식약처는 반발했다. 즉각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국감장에서 식약처장이 공식적으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어차피 식약처의 뭉치는 예상된 바다.

경실련은 다시 소송을 시작한다. 많은 시민, 법원까지도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와의 싸움이 슬프다. 시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슬프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 준비할 것이다.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의 재산을 포기하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 강행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부지를 10조원에 매입한 이후,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이 또한 곳 있다.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의료원 부지이다. 이곳은 2호선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 사이 탄천변에 위치한 곳으로 2011년 서울의료원이 중랑구로 이전하면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년창업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해당 부지에 대한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3만1543㎡, 건물 9개 동이며 예정가격은 9,725억원이다. 최종 낙찰자는 가장 비싼 금액을 적어낸 자로 선정된다.

1차 입찰당시 3.3㎡당 4.2억원에 팔린 한전부지와 비교해 인해 1조원 중반대의 매각이 예상됐지만(한전부지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며, 서울의료원은 준주거용지이다.) 유효



▲ 네이버지도 캡처

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바 있다. 서울시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14일 2차 입찰을 강행했다. 시는 부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격과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3차 입찰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찰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입찰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2차 입찰로 새 주인이 결정될지, 또다시 유찰될지를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 1조원 중반으로 예상됐던 가격이 1조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조원 이상으로 사겠다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해당 부지의 가치가 정말로 1조원 보다 적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서울의료원 매각은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재벌에게 넘기기 위한 결정이다.

〈표1〉 서울시 매입 공공기관 이전부지 가치 변화

(단위 : m², 억 원)

	위치	면적	매입금액	현재가치	상승률	매입
질병관리본부	은평구	102,684	2,300	6,445	2.8배	200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마포구	29,095	1,765	3,212	1.8배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서구	6,683	409	600	1.5배	2013년
대방동 미군기지	동작구	8,874	642	912	1.4배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대문구	21,937	-	-	-	2012년
계		169,273	5,116	11,169	2.2배	

주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1종 주거지역으로 주변시세를 산출할 수 없어 제외함
 주2) 현재가치 산출 방식 : 주변 같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

서울시가 감정한 3.3m²당 1억원, 총 1조원은 주변 토지 시세로만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바로 옆 한전부지는 4.2억원에 매각됐으며, 3종 주거지역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1.2억원이다. 강남지역에는 준주거지역이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학동역 옆 같은 용지역시 시세가 1.3억원이다. (상업-준주거-3종-2종 순으로 용적률이 높아 용도별로 가격이 다르다) 더구나 해당 토지는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현대차그룹이 매수한 한전부지 등 주변부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서울시가 매입했던 부지들의 가치상승과 비교해도 증명된 사실이다. 서울시가 매입한 공기업 이전 부지의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군기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유비축기지, 북부지청 등 관내 공기업 이전부지 10여 곳을 매입



▲ 서울시가 제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했다. 경실련이 이들 부지의 매입가와 주변시세 비교를 통해 가치상승을 분석한 결과, 매입이 10년이 지난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2.8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1.8배에서 1.4배 가치가 상승했다.

MICE산업을 내세운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전면적 재개발을 통해 서울시의 새로운 상업지역 중심이 될 것이다.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현재 도심부 대형빌딩 토지시세인 3.3m²당 3억 이상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추정이다. 몇몇 언론은 매각이 유찰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 1

조원이 실제 가치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매우 편협한 인식이다.

MICE산업 발전과 알짜 시유지 매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서울시의 삼성동일대를 재개발해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사업)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확고히 하고 있다. MICE산업의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유발 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왜 MICE 발전을 위해 민간매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다. 창의적인 민간의 능력

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제시한 해당 부지 MICE 산업시설 기준은 최소 3000㎡ 이상의 전시장, 1500㎡ 이상의 회의장이 전부다. 코엑스의 가장 작은 전시장(Hall D, 7281㎡)의 절반에 불과하다. 근처에 제2코엑스 건립으로 대규모의 MICE 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의료원의 MICE시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의료원 부지가 주상복합 등 국제 교류복합지구 구상과 다르게 개발되지 않도록 60%이상을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시설, 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케 공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시설 등 서울시가 각각의 용도를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기업은 60% 전부를 MICE와 상관없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로 채울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극히 일부분만 MICE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매입이후 개발을 거부하며 종상향 등을 요구할 위험성도 충분하다. 최근 성남시가 두산이 보유한 종합병원 부지 개발이 수십년째 중단되자 종상향 해준 사례도 있다.

민간기업 특혜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라

민간매각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 번째로 SH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이 있다. 신임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주택과 택지 공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사가 삼성동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개발을 시행한다면, 민간기업보다 훨씬 공익적 목적에 맞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민간기업에게 30년·50년 등 장기임대를 실시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미 복합쇼핑몰, 민자역사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없다며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난 7월 무역협회는 잠실운동장 남측부지에 장기임대 방식을 통한 제2코엑스 건립을 제안했다.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SH공사의 부채문제 등으로 공공개발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면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민간매각만을 고집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해당 부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그나마 남은 대규모 사유지를 전면 개발하는 것이 미래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안일까. 무조건 개발하고 보자는 토건 대한민국의 재판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개혁인가? 개악인가?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
wildwyde@ccej.or.kr



▲ 노사정 대타협을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

9월 13일 저녁 8시 30분 경.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단상에 선 김 위원장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노사정 합의가 마침내 성사되었음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제 관심은 쟁점사항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어떻게 결론 내려졌는지에 옮겨졌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로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명분도 얻으면서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야 말았다.

합의문 발표 직후 노동자의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타협이 아닌 야합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이 희석된 것과 함께 합의의 의미도 퇴색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합의의 내용이 실상 기업의 이



▲ 정부서울청사 노사정 대화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

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화를 통해 호소했듯, 현재의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 분석결과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경제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 합의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노사정 합의

노사정 합의안은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두 기준의 변경에 따라 노동환경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로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해진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할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노동자 대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법 개정 없이 정부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할 경우 법질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줄인다하더라도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가 추진된다면 청년실업해소는커녕 법치주의 원칙만 흔들리고 말 것이다.

고용불안 조장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규직이 과보호 되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성과자·근무불량자 등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현재에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서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에 머물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에는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수치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쉽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간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노동자 입장에서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찾기 힘든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기업이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 박병원 경총회장, 김대환 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비정규직이 만연된 경우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안에는 비정규직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이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까지 도입한다면 노동환경은 크게 저하될 것

경제위기

2015년 9. 10월호

이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 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바로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해야하며,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어야 하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 설립신고 반려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노동법령과 행정관청 관행의 후진성부터 우선 극복해야 한다.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해야 하며,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을 환원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이번 합의는 노동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노동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 활성화, 실상은 빗덩이?

윤은주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빗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갭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였다.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표1〉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단위: m², 억 원)

구분	'12년 하반기	'13년 1/4	'13년 2/4	'13년 3/4	'13년 4/4	'14년 1/4	'14년 2/4	'14년 3/4	'14년 4/4
비율	39%	35%	31%	38%	24%	28%	30%	35%	41%

주) '12년은 7월~12월 통계 집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2015.3.19.)
분석)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 (주택구입비 / 주택거래건수) / 중위 매매가격 × 100%

〈표2〉 분기별 신규 주택구입비와 3분위 가계소득 변화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12년 하반기	13년 4분기	14년 4분기	13년 4분기
신규 주택구입비	16.2조원	13.7조원	25.6조원	-
비율	39%	24%	41%	-
가구소득	4,017	4,207	4,213	4,210
처분가능소득	3,321	3,443	3,476	3,387

주) 가구소득은 당해 4분기 기준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겨우 4.5% 증가했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 원으로, 2012년 4분기 16.2조 원보다 37%나 늘었다. 반면, 가구 소득 증가는 미비했다. 월평균 400만 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3분위(5분위 기준)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2년 4분기 대비 2015년 2분기는 소득은 19만 원(402→421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7만 원(332→339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보다 빚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빠르다. 가구의 소득증가 없이 과도하게 늘어난 빚은 가계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40%에서 45% 수준으로 높이고, 거치식 대출의 거치기간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가 1년 만에 확 얼굴을 바꿔 ‘빚냈으면 갚아 나가라’고 한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가계부채 급증하자 대출을 억제한다는 예측 안 되는 정부 정책에 시민만 피해를 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 DTI 규제 완화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아주 통통 불어터진 국수라고 언급하며 “그것을 그냥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 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며 “불어터지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 한탄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매매 활성화의 실상은 온통 빗덩이다.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고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활동을 재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번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부패공화국 오명 벗자는데... 부정부패에 눈 감자고?

‘김영란법’ 개정의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김삼수 정치사법팀 팀장
peace@ccej.or.kr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이 수난을 겪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충선을 앞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까지 호응하고 나서면서 연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 국민권의 위원회는 한국법제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선물 5만원 이상, 과일·한우세트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확정했다. 이정보 권익위원장은 “입법취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김영란법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부정부패 근절하는데 예외 있어서는 안 돼

지난 3월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교직원들이 대가성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법 통과와 동시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결 당시 ‘김영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까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도 되기 전에 고치겠다고 한다. 충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대변인처럼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여야의 모습에 입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법안의 근본 취지도 살아나지 못한다. 특히 농·축·어업소득의 안정화는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김영란법’을 무력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축·어업 생산물의 가격보장과 판로보장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특정



통일대박? 말은 무성한테 북한학과는 달랑 2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 인터뷰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
lolen86@ccej.or.kr



▲ 건국대 연구실에서 만난 전영선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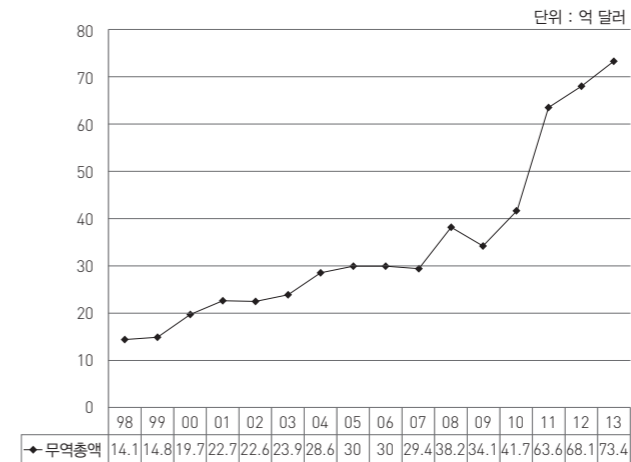
북한 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린다. ‘꽃제비’와 ‘군사 퍼레이드’다. 하나는 북한의 굶주림을 상징하고,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적대감을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에게 북한이 경제·사회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 의구심부터 품는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는 남한의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것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단위별로 경제 자율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는 남한에 비해 보잘것없다. 그러나 북한의 연도별 경제·사회적 변화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 시각은 달라진다. 통계

청이 작년 12월 발간한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0만6000 M/T로 98년 집계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총액(수출액+수입액) 역시 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명목GNI나 1인당GNI 역시 상승세이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국가여야만 한다. 사실 그대로 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접근하기보다 감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더 큰 문제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후 이러한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 70년, 만남이 중단된 남북의 현재 모습이다.

북한의 변화 90년대부터 주목해야



▲ 연도별 북한 무역총액

전 교수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급작스러운 일이 아닌,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은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경제체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북한이 기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



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7·1조치는 물가 인상, 급여 인상, 배급제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 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경제조치들로 축적된 결과물이 김정은 정권 이후 인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북한 경제 주체로 개인의 경제활동이 부각되면서 경제중심 주체가 소비자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 예로 북중 접경지역인 단동의 밀수품 또는 교류품목이 생필품보다는 다양한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북한이 강조해 왔던 '자력갱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 교수는 중국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했다. 전 교수는 유희장, 수영장 건설 등 북한 정권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설 사업들이 실제로는 중국자본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전역에 걸쳐 인민생활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의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북한의 경제, 사회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자생력뿐만 아니라, 나날이 비중이 커져만 가는 북한 경제·사회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 5.24조치 직전인 2009년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50% 정도였지만 5·24조치 이후인 2010년에는 83%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90%에 이르렀다.

사회문화교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운영 필요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비합리적·감정적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비정치·비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었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대부분 중단돼 남북 간 만남이 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 교수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비정치분야의 교류협



▲ 통일교육 동영상 <북한의 양면성>의 한 장면

력을 통해 정치적 긴장완화를 이룬다는 데 있으나, 현재는 반대로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정치·군사 분야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기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상상력 부족 ▲후속 프로그램 부재 ▲사업 목적의 불분명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전 교수는 기존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이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서 이벤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 미비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반면 법적 근거가 명확한 거래할 큰 사전 사업은 남북관계 악화와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 현재 남북 거래할큰사전 편찬 사업은 70% 가량 진행되었다. 지난달 5~11일에도 남북은 중국 선양에서 만남을 가졌다. 예정대로라면 2019년에 편찬사업이 완료된다.

이어 전 교수는 분단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기형적인 분단구조가 고착화·일상화되면서 통일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전 교수는 작년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 발언



▲ 통일교육원에 명시된 통일교육의 목표

이후 우리 사회 통일담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통일담론을 실질적인 현실 변화로 이끌 시스템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통일박람회 개최 등 정부 차원의 통일대박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대박과 통일준비 체제로 가는 흐름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 예로 통일대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즉 구호로서의 통일대박, 통일준비는 넘쳐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는 것이다.

맞춤형 통일교육으로 통일담론을 현실화시켜야

그렇다면 왜곡되고 고착화된 분단구조를 깨고, 실질적인 통일을 구현하

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통일이 담론을 넘어 현실로 구현되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전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 대한 단순 정보나 내용을 통지하는 수준의 기존의 획일화된 통일교육으로는 고착화된 분단구조의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에 대한 단답식, 천편일률적인 답을 요구하는 '통일 골든벨 대회' 를 들 수 있다. 전 교수는 계층, 나이, 연령, 직업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삶과 연결하여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통일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전 교수는 통일은 사회적 관심이 불었을 때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쏟아지는 통일담론에도 불구하고 관계자가 아니면 통일교육을 받는 성인은 눈 씻고 찾아도 찾기 힘들다는 점, 전국 대학에 북한학과는 2개 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오는 괴리감을 지적하며, 이러한 통일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성공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교수는 통일은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며, 준비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이, 함께 새로 쓰는 경실련

정유림 정치사법팀 간사
square520@ccej.or.kr

8월 21일~22일 양일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서 제13기 4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새로운 O(Organization Identity)와 함께, 전국에 있는 경실련 구성원들이 모여 남은 2015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 8월 21일 제13기 4차 중앙위원회

경실련 운동의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개최된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 2015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 양평경실련 창립 승인 ▲ 포항경실련 재창립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했다.

중앙위원회 개최 전, 지역경실련 모범

운동 사례 발표가 첫 시작을 열었다. 전국 경실련 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경실련이 진행한 사업 중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에 부합한 의미 있는 사례 5개를 추렸다. 경기도협의회는 지역경실련의 일상적 교류와 경기도정 감시운동을 통해 경기도의 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구미경실련은 생활 속 일제잔재 청



▲ 중앙경실련 정유림 간사와 목포경실련 김창모 간사가 우리의 다짐을 낭독중이다.

산 시민운동을 진행하여 구미 시에서 시작된 운동을 경북도와 대구시까지 확산시키는 중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인천경실련은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지방자치 속 신흥 정보 독점 세력을 견제했다. 포항경실련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1만 명의 시민들과 소통을 나눴다. 중앙위원회 참석자들의 투표가 있었으며, 최종 우수사례는 상집회에서 결정하여 11월 중앙경실련 창립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경실련 통합성제고와 운동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했다. 고문, 공동대표 그룹부터 상근자들 그룹까지 여섯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경실련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올 한해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유기적 관계형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경실련 활동을 시민에게 쉽게 알리는 방식과 시민과의 멤버십 구축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을 마친 후,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에서 제출한 201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 하반기 경실련 운동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2. 서민·노동자 및 소비자 등 경제기반층 보호
3. 삼권(정부·국회·법원)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개혁 운동
4. 안전한 사회 구축

새로운 지역 경실련의 출발도 알렸다. 양평경실련 창립을 이번 중앙위원회가 승인했다. 양평경실련의 독자적인 활동과 경기도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연대도 기대된다. 더불어 포항경실련도 재창립을 승인받았다. 포항경실련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조직 정비를 통해 각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했다. 최근에는 회원과 회비도 늘고,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번 재창립 승인으로 우수 지역 경실련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중앙위원회의 마지막은 신입 간사들의 선창으로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경실련의 김창모 간사와 중앙경실련의 정유림 간사가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경실련 사람들은 바르고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다짐'을 함께 제창했다.

단수(斷水) 사태로 드러난 청주시의 민낯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ok@ok.or.kr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

한창 더운 여름이었던 지난 8월 1일 ~ 4일 청주시 11개 동, 17,406가구와 상가 2,504곳에서 수돗물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무더운 여름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주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청주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였다.

‘일등경제 으뜸청주’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청주시는 제대로 된 공사수칙, 재난 매뉴얼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메르스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주시민들은 행정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또 다시 지켜봤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인 것이다.

시의회는 뭐하는 곳인가? 해외연수냐 조사위원회냐, 그것이 문제로다

청주시의 대처도 기가 막혔지만 청주시의회의 행태도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단수사태 직후 시의회는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수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네 마네 말만 무성하게 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해외여행’ 가려고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당초 시의회 의장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사고가 난 지역구 의원들이 의장의 발언에 ‘항명’하였다.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의원들은 조사위원회를 원래 구성하려고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예정대로 떠났다. 참고로 일부 위원회는 올 초에 해외연수를 이미 갔다 왔는데,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대한민국의 사고 = 인재(人災) 전문성도 부족, 준비도 부족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된 청주시 상수도 사고원인 조사 위원회가 9월초 기자회견을 갖고 ‘수돗물 단수 사태’의 원인을 공식 발표했다.

조사위는 도수관로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900mm 도수관과 800mm 도수관을 연결하는 신축관에 휘어짐이 발생하면서 누수 방지용 고무링의 압착에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치밀한 준비 없이 작업을 했다는 뜻으로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사의 사전 준비 소홀이 단수피해



▲ 충북·청주경실련 주최로 단수사태 관련 주민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8.11)

의 주원인이었다.

더욱이 공사 시간을 잘못 예측한 것도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몇 시간 후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시 발표를 믿고 주민들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차라리 사고가 나서 며칠 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해 줬으면 각자 알아서 준비라도 했을텐데...

시민 차원의 대응 - 공익소송 준비

이런 일은 평소 청주경실련이 앞장서서 총대(!)를 매는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청도 갈팡질팡, 시의회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접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모아 주민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시민대책위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와 청주시의 상황별 재난관리 매뉴얼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하여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의 사고 대처를 지켜보고 있지만, 보상·배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공익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여름의 단수 사태...

작게 보면 수돗물이 며칠 안 나온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의 엉터리 행정과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의 ‘본심’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아울러 평소엔 몰랐던 물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

청주경실련

2015년 9.10일

공공개혁 하려면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멈춰야 한다

정재욱
수원경실련 간사
swccej@daum.net

박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담화에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개혁은 비단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방정부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실련은 인사개혁이 곧 공공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주장해왔으며, 수원경실련에서는 수원시 산하기관의 인사현황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취지

‘수원시 산하기관의 공무원 출신 기관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이다. 수원시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상당수가 수원시 공무원 출신들이다. 작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관료 출신 낙하산이 조금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지만 수원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이에 수원경실련은 지난 5년 동안의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장 및 사무책임자 임명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기간 : 2009년 4월~2015년 4월

조사대상 : 수원시 공기업 및 산하기관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재)수원FC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생활체육회

조사 방법 : 각 기관별 기관장 등 정보공개청구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조회·경력사항 인터넷 조사

분석 범위 : 각 기관별 유급 기관장 및 사무책임자

분석결과

11개의 기관 중 8개 기관(73%), 27명의 인사 중 15명(56%)이 공무원출신

1) 기관장 - 분석대상 기관장 중 67%가 공무원 출신

분석대상 6개 기관, 15명의 기관장 가운데 10명(67%)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10명 모두 수원시 공무원 출신이며 10명 중 8명이 구청장 출신이다. 또한, 6개 기관 중 현재 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인 곳이 5개 기관(83%)임을 알 수 있다.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표1〉 수원시 산하기관 기관장 및 사무책임자 등 임명 및 연임 현황(11개 기관/27명 조사대상)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임명자)

기관명	분류	임기개시일	성명	주요경력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07.12.03	임병석	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2010.10.25	서석인	푸르덴셜투자증권 부분부장
		2013.03.05	이광인	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2014.03.05	윤건모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012.01	유완식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2013.02	리수홍	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2014.08	*김정수	수원시 권선구 구청장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2009.11	엄익수	경기지역정책연구소 소장
		2010.12	임광진	수원시의회 시의원
		2013.03	김충영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
		2015.03	*홍성관	수원시 장안구 구청장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2010.11	김현철	수원시의회 시의원
		2014.02	강명석	수원시 환경국 위생정책과장 권선구보건소장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2007.12	김정복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2010.12	이중화	수원시 기획예산과장
		2015.02	*김지완	수원시 건설교통국 국장 수원시 권선구 구청장
(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2013.02	손혁재	경기대학교 교수 경기지역정책연구소 소장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2010.12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
		2014.12	*박창재	수원 서호노인복지관 총무과장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센터장	2011.10	신윤범	수원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수원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2007.12	윤태현	수원시 팔달구청장
		2011.07	이내응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이사
수원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2005.02	김춘식	해태유업 임원
		2011.02	오태규	수원시탁구연합회 이사
		2012.10	문창호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장
(재)수원FC	사무국장	2010.12	심중식	수성고 총동문회 사무총장
		2015.02	*김응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이는 사무관리직 중 요직을 차지하는 사무국장에도 1/3 이상이 공무원 출신임을 알 수 있다.

2) 사무책임자 - 분석대상 사무책임자 중 42%가 공무원 출신

분석대상 5개 기관, 사무책임직 12명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5명(42%)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생활체육회, (재)수원FC



(재)수원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재)수원FC 국장) 5명의 인사 중 4명(80%)이 수원시 공무원출신이었다. 관피아 적결보다 인사적체 완화가 수원시에서는 더 중요하게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수원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인적 결합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은 산하기관이라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해결하고 위탁기관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산하·위탁기관도 공공기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해당기관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고, 기능의 전문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정보공개로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성을 심분 발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치단체 부처와 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대상 범위 가운데 외부 기관장으로 임명된 공무원 출신의 경력을 분석해보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경험은 있을지라도 실무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산하기관이 행정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전문성이나 창의성보다 행정중심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로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각 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한 실무를 관장하고 기관 운영전반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

관 본 업무에 밝지 않고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보조기관의 주요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인적 결합이 강화돼 부정을 봐주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므로 공무원 출신의 기관장 임명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출신들이 외부 기관장으로 대거 포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시와 산하 외부 기관과의 인적 결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관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기관의 임면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작동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활동 과정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임추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해 후보 추천 심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여서 투명성에 취약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동시행령, 수원시출자출연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기관에 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원 임명에 관한 절차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 임원에 관한 사항도 기관 정관에 위임했을 뿐 규정이나 절차는 없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인해 보은인사나 사전에 특정 인사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나마 공개모집을 통해 편법채용, 또는 비공

개 채용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불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수원시 산하기관의 제대로 된 인사를 위한 인사 시스템 개편이 시급

(1) 관피아로 인한 문제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주요 보직에 있는 공무원이 산하 기관에 개입하여 이해관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기관장 및 사무책임자 임명에서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2)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수원시 조례가 간과하고 있는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3) 수원시의 산하기관도 지방공기업 공개시스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은 별도의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경영정보는 물론이고 임원 및 주요 보직 임명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 수원시는 공기업 산하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관할관청의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총 11개 기관 27명의 조사대상 중 15명(56%)이 수원시 공무원 출신

총괄평가

1) 수원시 산하기관을 수원시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원시 산하기관 임직원 인사의 경우 수원시의 인사적체의 현상을 해결하고자 고위 공무원을 산하기관장으로 발령을 내려 인사에 숨통을 틔우는 관행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작년에 3급 공무원(부이사관급) 직제를 3개까지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인사적체를 다소 해소하였다. 돌려막기 식의 인사가 수원시의 관행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부터 그러한 관행이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이번에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공무원 출신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했다.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행된 수원시 산하단체의 기관장 및 사무책임자 (5개 기관: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서민들이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게 힘써주세요”

박윤수 회원 인터뷰

오세형 기획총무팀 간사
dlipsec@ccej.or.kr



▲ 박윤수 회원 가족 사진 (아버지 박승철씨, 아내 전계현씨, 아들 민준 군)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30대 중반의 법률종사자입니다. 서울의 법조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교대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경실련 회원에 가입한 계기가 있나요?

A.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부격차 등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함에 관

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관심에서 시작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사회 정의구축에 참여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회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그와 관련하여 경실련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A. 평범한 서민이다 보니 역시 재벌이나 대

기업에 대한 특별대우 등에 관심이 많고 경실련이 불평등하고 부당한 대우를 서민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Q. 30대 중반에 접어든,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무게감도 느끼시나요?

A. 물론입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있지만 일을 쉬고 휴식을 가진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시쳇말로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직장생활도 또 터무니없는 업무를 맡아도 참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매 순간이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Q. 올 12월이면 돌을 맞는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들이 준 사랑이라던가? 아들 자랑을 하신다면?

A.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형제 중 맏이여서 아버지와 살가운 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데, 민준이(아들이름)가 태어나고부터는 조금 더 아버지께 친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변화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물론 무엇보다도 저를 닮아 민준이가 매우 똑똑한 것이 정말 좋고요. 하하.

Q. 경실련이 이런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했다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여러 분야에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 아버지는 사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광고카피가 생각나는 사진이다. 박윤수 회원 아내와 아들

있습니다. 강화라기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Q. 경실련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위한 조언, 바라는 점도 부탁드립니다.

A. 어느 곳이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고 힘들지 않은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경실련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에게도 바라는 점은 단체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없이 서로 단결하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

지금, 다시, 데미안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우린 항상 스스로를 궁금해 한다. 그래서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서적을 많이들 찾는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훑쳐보는 것만으로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안고...

데미안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1919년 발표되고 난 후 유럽전역에서 유행했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 주요 고전으로 남아있다. 헤르만헤세(Herman Hesse, 1877년 7월 2일 ~ 1962년 8월 9일)는 데미안을 통해 한 소년의 성장을 그리며, 인식의 탐구과정을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데미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단순히 주요 고전 중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게 아닌가. 일부 문화계 종사자들은 분명 그런 것 같다.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 '헤세와 그림들전'이다. (전쟁기념관이란 이름부터 별로다)

중요한 건 인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데미안을 다시 읽었다. 10대, 20대에 이어 3번째다. 나를 송두리째 흔든 책들 중 하나이다. 그만큼 애착이 강하다. 그런 기대가 '헤세와 그림들전'으로 발걸음을 이끌었다. 하지만 내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그가 남긴 아름다운 글들만이 위안을 준다. 본래 그의 것이었던 글들을 제외하곤 '헤세와 그림들전'은 (개인적으로) 최악이다. 글과 그림이 영상과 만난다. 지난 반고흐전에 이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전시회이다. 현대 기술이 조약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헤르만 헤세는 우스꽝스럽게 3D로 움직이는 그래픽이 아니다. 내 느낌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화면은 바뀌고 헤세는 그림 속을 걸어 다닌다.

최근 다시 주목 받는 데미안의 인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실패다. 데미안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도 않다. 데미안의 초판본을 유리벽 넘어 만날 수 있는게 전부이다.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3D 기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 전시회는 불필요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들 부모의 욕구는 일부 충족시켜주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전시회는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헤세는 데미안, 유리알 유희의 작가이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헤세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의 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 선생이다. 자전적인 경험이 쏟아내는 등대 같은 글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그 역시 청년기를 부모에 의해 억눌려 산다. 그 억눌림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그리고 결국 아주 조금이나마 진보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그 글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언제나 물어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싸우라” 데미안을 관통하는 단순한 문장을 만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심지어 여태껏 자의적인 해석만 하고 있다. 헤세는 젊음의 불안과 방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나 자신에게 이르르기”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고.

다시 만난 데미안과, 조악하지만 헤세를 자세히 알게 해준 '헤세와 그림들전'을 통해 잊혀진 기억들을 되돌릴 수 있었다. 헤세는 필자에게 “언제나 물어야 하고, 언제나 의심해야 한다”는 가치를 심어주었다. 과도하게 비판적인 시각을 심어주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가치가 사회를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초아가 됐다.

지금 우리 젊음들에게 가장 필요한건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젊은이들을 N포 세대라고 약 올린다. 불쾌하다. 상황에 굴복하는 젊은이들을 상정해놓고 프레임을 몰아간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수많은 젊음은 그들의 소망과 가치가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다. 단지 누군가의 말따라 우리가 뛰는 운동장이 이미 엉망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면 답은 쉽다. 데미안도 그런 이야기길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다.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앞에서 깨어나라. 허세 섞어 읊지만 말고, 이상함에 불공정에 부딪혀라.

추천한다. 전시회에 가지 말고 데미안을 다시 들어라. 



도시화율 90% !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시 입문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지음, 보성각

오세형 기획총무팀 간사 dipsec@ccej.or.kr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예부터 사람들은 군락을 이루며 살았다. 도시를 만들어냈고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책은 그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다.

책의 두께가 심상치 않다. 하드커버이다. 그러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책은 도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총망라하고 있다.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도시의 미래상까지 다룬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정작 도시에 대한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는 유용한 책이다.

책은 때론 깊이있게 때론 가볍게 도시를 다룬다.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부분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한국의 도시화는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연히 빠른 진행에 따른 많은 도시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난, 넘쳐나는 쓰레기와 공해, 교통난 등도 여전히 발생하지만 도시공동화 등 2차적 문제들도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도시재생까지 오게 된 경위와 그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책을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스마트’한 세상이다. 스마트한 집, 스마트한 도시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기반시설, 건물, 물건과 우리 신체에 까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도시 환경은 공상과학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 과도한 기술만능주의, 몇몇 대기업에 치우친 도시기술개발 등을 경계하여 도시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0년대 중반 도시화율이 90%가 넘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기본 교양서로 머리말에 두고 볼 책이라 확신한다.



“통일을 왜 해야하죠?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경실련통일협회 지음, 도서출판 선인

홍명근 통일협회 간사 lolen86@ccej.or.kr

“통일을 왜 해야하죠?”

통일운동을 하면 슬하게 듣는 질문이다. 그런 경우 반대로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물어본다. 이 질문에 답은 그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면 쉽다.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해야하죠?”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참 어렵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작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통일담론을 재검토하고 대안적 통일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아 지난 8월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라는 도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부에서는 민족주의 통일론과 보편주의 통일론을 중심으로 통일이념을 살펴보고 있다. II 부는 통일원칙, 특히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 원칙을 둘러싸고 통일 3원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논의한다. 제 III 부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3단계 통일방안의 실현 방안,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한반도 연방제’와 ‘한반도 민주평화상생통일방안’을 이야기한다. 제 IV 부는 통일활동가들이 말하는 통일운동의 성찰과 과제이다. 제 V 부는 통일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다. 70년 전 주권을 되찾아 올 때 최대 화두였던 ‘평화(平和)’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도서는 시대착오적인 왜곡된 통일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실사구시적인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남북관계는 여전히 엄중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앞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책은 남북 간 이념, 정파, 갈등을 뛰어넘어 조금이나마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경관

2015년 9. 10월

2개월간의 경실련 인턴 생활을 마치며



백승혁
사회정책팀 인턴
shbaik@hanyang.ac.kr

이번 여름학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지원하여 2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경실련의 많은 부서들 중에서도 사회정책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경실련에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인터넷의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긴 하였지만 사회정책팀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은 상태에서 사회정책팀의 인턴으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정책팀의 국장님, 그리고 간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사회정책팀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까지 많은 부분들을 저에게 공유해주시고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사회정책팀은 크게 나누고 분류해보자면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신경을 쓰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경실련, 그 중에서도 사회정책팀이 대표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에 사회정책팀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 바쁘게 활동했던 현안은 바로 메르스 관련 국가방역체계 문제였습니다. 이번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정책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인 국가방역체계의 이상을 환기하고자 피해자들을 대표로 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참가하는 등의 노

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독립성에 관하여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국비를 지원 받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등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 광역시의 재정자립이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인턴들이 참관한 메르스 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위해 지난 평가 등과 비교해보았을 때 얼마나 공약을 이행하였고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 정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턴이지만 국장님의 관심 아래에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사회정책팀의 업무들을 관여하고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인턴들이 참관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기자회견 모습

이번에 경실련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은 경실련이 다루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사회정책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며 우리 사회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시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관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타 기업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그저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지



▲ 2015 하계 인턴 프로젝트 발표


만 경실련의 일원으로서 경실련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며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작지만 무언가를 기여한다는 생각을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나가며 놓치기 쉬운 우리의 권리를 일깨워 주는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 경실련이고 이곳에서 짧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을 근무하며 쌓은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정책팀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 동기 인턴들과 국가의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팀프로젝트를 하며 우리가 상근 활동가는 아니지만 경실련 소속으로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실련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 2015 하계 인턴

이처럼 활동하는 2개월 동안 많은 상근자분들께 경실련이 바라보는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인턴을 마치고도 경실련의 발걸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데스크(Desk)가 데스크(Desk)에게

데스크라는 말이 있다. 신문사나 방송국의 편집부에서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편집장은 신문, 잡지, 책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기 위한 취재 편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문사나 잡지사 등의 데스크나 편집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출판물의 명성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간경실련 발간 업무를 맡아서 준비한지 어느 덧 이번 호가 3번째가 된다. 월간경실련의 첫 맛은 보았다고 할까. 그래서 생각해본다. 내가 데스크라면, 편집장이라면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을까.

순간순간 나태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가. 익숙해지면 좋지만 그 만큼 매너리즘에 빠져 알맹이는 부족한 형식적 출판에 그칠 위험이 높다. 경실련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시의성과 민감성을 갖고 있는 적절한 주제들을 찾아서 편집회의를 하고, 좋은 원고가 나오도록 독려하고, 기한에 맞게 글을 취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기획특집과 시사포커스와 같이 경실련 운동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여러 콘텐츠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종이의 재질부터 컬러까지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보다 친근한 매체로의 변화를 이루어가길 바란다.

관심과 정성을 쏟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을 수 있는 작업이 책자를 내는 것 아닌가한다. 생각했던 바람들을 포함하여 더 좋은 책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오세형
기획총무팀 간사
dipseo@ccej.or.kr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어드립니다 ^^

■ '기초지자체별 분양률 현황' 보고서를 읽고

(09.11) ZeroDevice <페이스북>

보고서에 뒤 이은 법 개정 움직임 등은 없나요?

▶ 엉터리 과장 허위 광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은주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dongi7878 )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을 보고

(9.15) /Seun Lim <페이스북>

누구를 위한 노총인가요?

▶ 월간경실련 본문에도 언급하듯이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및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조-비노조 구분지어 반목하기보다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택수 경제정책팀 간사(@wildwylde2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김동욱 | 올바른 사회구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김동현 | 경실련에 대해 많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 | 멋집니다.

김정량 | 갑질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세상을 위하여!

박지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각종 기준들이나 규제 등에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박현호 | 인천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고 참여합니다.

방승범 | 경실련 파이팅입니다!^^

윤정중 |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장현갑 |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자영업자입니다.

프라임인더스트리(주) | 재벌이 중소기업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트위터 @cyberngo

전송 02-741-8564~5

Homepage 	Twitter 	Facebook 
---------------------------------------------------------------------------------------------------	--------------------------------------------------------------------------------------------------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5. 07

- 07.17 "박 대통령, '사면권 엄격제한' 국민약속 이행해야" 법치주의 훼손하는 사면은 정권불신 자초하는 것
- 07.17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07.17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합에 대한 입장 발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치뿐인 영광"
- 07.20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대두 77% GMO" ▶사진0
- 07.23 경실련, '삼성동 어울의료원부지 민간매각' 공개질의서 발송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07.24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준위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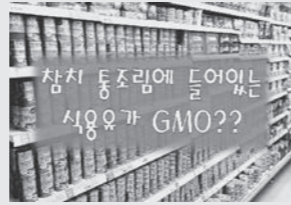


사진0



사진1

2015. 08

- 08.04 중앙선관위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안' 수용 촉구 "선거제도 개혁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확대가 핵심이다"
- 08.04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발표
- 08.05 박근혜정부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 중단 촉구
- 08.06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박원순 시장은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라"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발표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광복70주년, 시민단체 연대선언 및 심포지엄 "염원에서 실천으로" ▶사진2-1, 2-2
- 08.07 박 대통령 '재벌 살리기 특별사면' 전면 재검토 촉구



사진2-1



사진2-2

- 08.10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
- 08.11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 촉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회에 대한 입장 발표
- 08.12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08.13 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 08.17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할 것
통일준비위원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 08.18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8.19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폐기 촉구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및 전월세 문제 해결 촉구
- 08.19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을 위험" 토론회 개최 ▶사진3
- 08.20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발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및 공개질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08.21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발표
- 08.25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 북콘서트
- 08.25 남북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발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민증세, 지방재정 악화 부추기는 지방세제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08.26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
- 08.27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도시가스 매물형 불발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08.28 정중섭 장관·최경환 부총리 선거 개입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
- 08.30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발표
- 08.31 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식약청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사진3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5. 09

09.01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성명 발표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국회 기자회견 ▶ 사진4



사진4

09.02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30차 열린 좌담회 개최

09.0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 성명 발표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성명 발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성명 발표



사진5

09.0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사진5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 발표

09.10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09.11 '경실련·이미경의원 공동 기초지자체별 분양률 현황 분석' 발표

09.14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발표

09.15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성명 발표
'권력 눈치 보는 선관위, 선거 불신만 초래' 성명 발표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18명, 가입일 : 2015년 7월 23일 ~ 2015년 9월 23일)

주요성원(이명)	곽수현	김상철	김재성	김형철	박경심	복아영	안경수	유록수	이동학	이진준	조명래	하성란
대정건설(주)	김명기	김세준	김정량	김홍기	박경용	서사은	안석현	유민상	이동희	이창은	조윤제	하정수
중앙일보(주)	김경미	김수근	김정수	김효성	박기태	서진숙	안혜정	유상철	이미나	임순옥	조찬완	한민호
파워엔터테인먼트	김기진	김영란	김정아	김희정	박은정	서효정	양경모	유숙현	이봉진	장경식	주승우	한민호
김미심	김대열	김용필	김준환	나동현	박인호	설점순	양진옥	유제현	이상구	장승희	최성관	한준구
강상섭	김도완	김유리	김지훈	남상규	박준규	손소용	양창훈	윤정중	이상구	장현갑	최유식	한진석
강수화	김동욱	김의자	김태균	도승표	박현호	손홍주	오연석	이경욱	이상희	전해란	최윤정	황보경운
강정효	김동현	김인숙	김한엽	문기영	반주현	신동민	오현주	이귀선	이세형	정승태	최진옥	황영필
고금순	김부근	김재명	김형기	민현정	방승범	신해운	원희연	이규인	이영호	정은선	평 화	황영한

분부	김혜정	권동현	김관영	김명목	김서현	김영실	김윤두	김종근	김찬동	김해성
(주)아이티엔티	강홍천	권득용	김관용	김명애	김석환	김영은	김윤석	김종덕	김찬석	김해숙
군산경실련	경민수	권상용	김광배	김명임	김선필	김영재	김윤식	김종록	김찬호	김형선
그리스도대학교 교육협력회	계충미	권상주	김국주	김영철	김선화	김영주	김윤희	김종목	김창균	김현동
브이앤비(주)	고강석	권상현	김귀해	김영환	김선희	김영준	김 용	김종민	김창범	김현덕
아름다운한의원	고경일	권성윤	김규범	김무준	김성민	김영준	김은영	김종배	김창식	김현석
크레딧책임(주)	고말임	권순범	김규훈	김문환	김성수	김영철	김익수	김종섭	김채윤	김현성
피터엘월드스텍	고영희	권순용	김근수	김미진	김성수	김영출	김익수	김종우	김 천	김현성
한국산업저축은행계좌합	고 율	권영봉	김근철	김민수	김성숙	김예승	김인곤	김종찬	김천중	김현정
	강경수	고은진	권영준	김근초	김민재	김성일	김원래	김인선	김종혁	김 철
	강국신	고지석	권영진	김기숙	김민주	김성종	김원배	김인숙	김주목	김철주
	강내원	고진강	권오진	김기열	김병각	김성태	김원욱	김인영	김주영	김철호
	강덕순	고행산	권윤규	김나리	김병구	김성필	김형식	김인태	김주영	김철호
	강명구	고형석	권윤정	김나리	김병성	김세정	김용남	김인환	김주중	김철홍
	강문희	공병욱	권율학	김남덕	김병수	김세준	김용석	김일수	김 준	김철환
	강민구	공정표	권일민	김남인	김병수	김세중	김용섭	김재구	김준배	김충환
	강상구	공진하	권준기	김남훈	김병수	김세중	김용숙	김재구	김준석	김치수
	강선미	공태영	권준석	김대균	김병주	김세진	김용식	김재길	김준식	김태균
	강성일	곽기훈	권준우	김대선	김병학	김소라	김용직	김재일	김준영	김태균
	강성주	곽세준	권 찬	김대성	김병호	김소희	김용찬	김재하	김준한	김태수
	강영식	곽세별	권철민	김대중	김보경	김수영	김용철	김재화	김준호	김태수
	강영훈	곽지웅	권태환	김대현	김보라미	김숙희	김용철	김재환	김지연	김태완
	강용수	곽호석	권항년	김대호	김보람	김순임	김용태	김정국	김지영	김태윤
	강원호	곽희남	권혁민	김대훈	김복환	김승보	김용태	김정돈	김지현	김태진
	강은현	구경이	권호철	김동균	김부경	김시연	김용하	김정수	김지혜	김태현
	강일환	구길두	김강민	김동영	김 삼	김애자	김용호	김정신	김지호	김태현
	강재혁	구상찬	김건호	김동욱	김상용	김양규	김우비	김정욱	김진구	김태형
	강주현	구수정	김경모	김동을	김상겸	김양수	김원석	김정원	김진담	김태호
	강지영	구자홍	김경배	김동호	김상균	김양진	김원태	김정현	김진만	김태호
	강창걸	구혜인	김경수	김동환	김상균	김연주	김유희	김정호	김진명	김태환
	강창구	권경무	김경수	김래관	김상영	김영미	김유신	김정호	김진석	김태훈
	강창균	권경숙	김경아	김만수	김상우	김영복	김유진	김정호	김진수	김태훈
	강철규	권계욱	김경준	김만호	김상중	김영선	김유찬	김정훈	김진아	김평진
	강철승	권구혁	김경철	김명균	김상현	김영섭	김유환	김제영	김진현	김하나
	강현신	권규향	김경환	김명기	김생수	김영순	김윤기	김종걸	김진효	김학수



나권일	민희숙	박승진	박지호	변창우	송민정	안현구	유남식	음유정	이동호	이순배	이정희	임건목	전병식	정윤희	조성희	천병우	최준혁	허창환	김대용	이양재	김장철
나기천	박건영	박양제	박지환	사동천	송병록	안호정	유덕열	이갑수	이민호	이승대	이정희	임병호	전봉양	정은영	조순열	천상렬	최종길	현승근	김덕기	이유미	김재기
나명희	박경서	박영규	박진아	서경호	송수영	안희숙	유동진	이강운	이명진	이승섭	이종건	임 삼	전봉진	정의곤	조연정	천승걸	최지한	형성훈	김도영	이은재	김재원
나병현	박경애	박영규	박진홍	서순탁	송용석	안희정	유영진	이건호	이명천	이승우	이종규	임서구	전상룡	정의정	조영록	최경순	최지현	홍광선	김동식	이재문	김정웅
나상민	박경준	박영기	박창민	서승환	송원기	안희철	유병상	이경도	이명훈	이신호	이종길	임세은	전상욱	정인호	조용기	최광규	최지훈	홍대식	김미경	이정식	김정진
남기원	박개원	박영남	박창임	서영덕	송은우	양광희	유병서	이경수	이모세	이애화	이종범	임영환	전성철	정일용	조윤정	최광현	최창배	홍도천	김석기	이제선	김정현
남상권	박광현	박영민	박철수	서완석	송인섭	양대규	유 송	이경숙	이미정	이연석	이종수	임용기	전영진	정재은	조은혜	최기환	최태영	홍미미	김성수	이주희	김재천
남영진	박고영	박영수	박치우	서용욱	송인윤	양두석	유인상	이경우	이민아	이영란	이종욱	임용섭	전용배	정재진	조은호	최다정	최현정	홍선표	김세용	이창수	김주호
남원호	박기영	박영웅	박태만	서우석	송태교	양부식	유인환	이경준	이병재	이영림	이종윤	임장원	전용일	정정래	조일흠	최덕천	최현준	홍성균	김 영	이현주	김진영
남현주	박기철	박영철	박태선	서윤석	송하동	양연식	유일용	이경태	이병관	이영범	이종훈	임정규	전우영	정정호	조재연	최덕호	최호영	홍성한	김재령	이희승	김진환
남호원	박기훈	박영환	박태영	서은경	신규철	양원표	유장연	이경희	이보실	이영욱	이주아	임종필	전장호	정재용	조재원	최동욱	최호용	홍순엽	김재익	임경수	김창석
남호현	박남규	박용석	박한용	서정일	신근택	양윤숙	유재민	이곤섭	이봉숙	이영음	이주하	임창선	정경수	정종원	조정근	최명희	최홍식	홍순영	김정인	임창규	김태환
노연경	박남수	박우룡	박한호	서종대	신동민	양인준	유재민	이광섭	이봉훈	이영채	이주형	임형빈	정경욱	정주연	조종철	최병오	최홍엽	홍종학	김정철	임형백	김학성
노재훈	박노건	박우석	박행우	서종철	신동애	양창우	유재욱	이광용	이상열	이영현	이준영	임태영	정권용	정준수	조준범	최병호	최희수	홍준표	김종길	장영진	김형만
노정호	박노현	박원규	박현진	서직원	신동조	양혁승	유재중	이광필	이상룡	이영호	이지영	임희윤	정덕일	정중식	조준형	최봉문	최희수	홍준현	김형욱	전은호	김희주
노희철	박다진	박윤수	박형근	서한송이	신동진	엄미화	유재혁	이광택	이상범	이용만	이지영	임희청	정만중	정진민	조진만	최석준	최희준	홍진구	김호현	정성훈	노귀남
라윤홍	박두영	박윤희	박형삼	서한이랑	신두철	엄원중	유종성	이광필	이상선	이용배	이지훈	장경완	정명채	정찬식	조진수	최성수	추동균	홍창기	나인수	정애리	당명숙
류도암	박미나	박은아	박혜란	석기영	신봉기	엄인수	유창선	이광현	이상엽	이용선	이진경	장동민	정미숙	정창률	조진오	최성실	탁 민	황경복	노두승	정인환	류현정
류동훈	박미선	박은준	박호걸	석철수	신상진	엄홍길	유명준	이규용	이상엽	이용승	이진영	장문호	정미화	정창수	조춘수	최성주	표규열	황기명	노웅래	조돈철	문행규
류명현	박민준	박은현	박호영	선동수	신승연	여은희	유해신	이규용	이상우	이용한	이진원	장미은	정범석	정창운	조태민	최성현	하상준	황선용	도선봉	조재형	박금해
류시문	박병섭	박응순	박홍순	선종국	신영철	여해경	유향민	이규철	이상윤	이운향	이창엽	장민수	정병록	정태근	조한희	최성훈	하용호	황선원	류성룡	최강림	박미라
류지성	박병오	박의용	박후근	설원식	신영철	염규석	유희숙	이균성	이상윤	이원식	이창호	장병호	정병순	정태영	조형준	최수진	하태주	황신영	류중석	최두호	박영희
류충렬	박병욱	박이규	박 훈	설창인	신원기	오다현	윤건수	이근식	이상진	이원재	이창희	장보름	정병오	정태민	조희근	최승섭	하현아	황신준	민범기	최명철	박용주
류형욱	박병일	박익중	박휘영	성광식	신용규	오동엽	윤경숙	이근태	이상철	이원재	이철우	장삼기	정병훈	정태성	주관수	최신애	한광덕	황영미	박경남	최윤정	박은주
류화근	박보성	박인구	박희령	성금성	신은정	오상엽	윤기복	이근행	이상현	이원희	이춘수	장석림	정삼룡	정태완	주상희	최영식	한동운	황유경	박상위	최정우	박주승
마경화	박상대	박인선	박희선	성병화	신정무	오상윤	윤대현	이근환	이상희	이윤규	이태섭	장석춘	정삼미	정태철	주용학	최영애	한상훈	황이남	박성우	하동익	박준우
마미영	박상렬	박재갑	반철진	성 신	신철영	오세정	윤득구	이금희	이석고	이운배	이태영	장승진	정석희	정택수	주익철	최영철	한석용	황이숙	박영웅	하상우	박준형
맹광영	박상성	박재완	방민식	성원규	신현호	오세호	윤상균	이기송	이석규	이운상	이태진	장심영	정선혜	정학수	주찬식	최옥현	한선아	황인구	박인순		배인교
맹성렬	박상혁	박재익	방상윤	성윤숙	심순혁	오순택	윤숙자	이기우	이석기	이운호	이학수	장영식	정선화	정한균	지동익	최은아	한승구	황인선	박재호	(세경실련통일협회)	배종근
문경식	박상희	박정교	방승범	소경섭	심충진	오승훈	윤영곤	이기용	이석범	이은재	이한길	장영오	정성봉	정해석	지동현	최원영	한승호	황진영	박정윤	강만성	백인용
문광기	박서희	박정민	방정혜	소진성	심해정	오장환	윤영천	이기종	이석원	이의영	이한민	장영환	정성심	정학제	지정희	최원천	한승호	황철진	박찬우	강은석	백학순
문금희	박선희	박정석	방종수	소현민	심후연	오제명	윤윤식	이기현	이석재	이익모	이한섭	장옥숙	정세진	정해경	진석수	최유영	한연하	황호식	박희정	강화영	변상호
문미란	박성배	박정식	배승철	손건일	안규창	오해승	윤은선	이기호	이석재	이인영	이현미	장용근	정세훈	정해승	진영수	최윤재	한영관	황효열	배용규	고석주	서관승
문상준	박성웅	박제화	배영기	손무길	안기정	우종복	윤은주	이낙원	이산신	이일권	이현석	장원규	정승상	정해승	진유식	최윤진	한용석		서민호	고유환	성재상
문석진	박성웅	박종근	배영환	손봉호	안병노	원대한	윤인오	이남경	이산태	이재강	이현성	장유리	정승준	정화성	진장훈	최은경	한용환	(세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서순탁	곽일환	송용석
문세영	박성정	박종석	배유아	손성일	안병익	원동재	윤일성	이다혜	이성계	이재걸	이현숙	장유환	정승화	정효진	진종난	최은식	한홍열	강순주	신행숙	권수복	신경화
문소상	박성혁	박종선	배인명	손승태	안상용	원동환	윤재웅	이대영	이성구	이재림	이현재	장은미	정연섭	정희창	차은상	최은진	함동균	강준모	심재민	김근식	신영욱
문인섭	박성훈	박종소	배장수	손우영	안세영	원영진	윤정섭	이덕희	이성근	이재욱	이형세	장종철	정연태	조강희	채두병	최인숙	함동균	고일두	양우현	김동규	신정웅
문장협	박세권	박종원	배종석	손재운	안영훈	원제환	윤정중	이동석	이성복	이재완	이형희	장철기	정영만	조건영	채민성	최인호	함두호	곽 도	오세형	김동환	신종성
문지원	박세원	박주은	백오한	손정아	안완용	원종호	윤종빈	이동석	이성욱	이재운	이호경	장형환	정영식	조경민	채예정	최 일	함형욱	곽충삼	원민철	김민식	안춘훈
문차호	박세현	박준수	백은정	손종보	안용식	원혜영	윤종식	이동석	이성원	이재은	이호섭	장혜령	정왕규	조광현	채원호	최창원	허남중	구지훈	유영모	김병조	위정희
문태현	박수행	박준영	백정숙	손호중	안인화	원홍식	윤지성	이동식	이성재	이재환	이호욱	장 훈	정용택	조광희	채종현	최재용	허병권	권영진	윤재용	김삼수	윤영진
문현정	박순기	박종철	백진현	손희경	안정혜	유관영	윤지원	이동주	이소영	이정남	이화영	장희근	정용화	조규홍	채준하	최정표	허 석	권 일	이동근	김성호	윤태룡
문 희	박솔아	박지원	변동철	손희준	안종범	유기선	윤진철	이동준	이승수	이정성	이화주	전기호	정운수	조병익	채홍석	최종석	허수범	김경희	이만희	김수동	이기자
민남미	박승배	박지은	변상해	송기민	안지현	유기천	윤한필	이동준	이수연	이정영	이 훈	전대홍	정원철	조상호	천기용	최종일	허원철	김광만	이명수	김용수	이승규
민병욱	박승상	박지혜	변재근	송기성	안진걸	유기청	유효상	이동한	이수영	이정현	이훈섭	전영석	정원희	조성태	천대용	최종철	허익배	김금옥	이병준	김용현	이우영
민선욱	박승욱	박지호	변준섭	송미영	안철원	유기현	은역수	이동호	이순기	이정희	이희중	전병순	정윤영	조성희	천민승	최준용	허지영	김기성	이순배	김은수	이용림



이순애	양영재	권기혁	손승완	정문정	김 욱	송영환	이형복	김광창	문 욱	손만호
이유설	어중석	권병훈	송영식	정성운	김원희	송인걸	장복수	김기권	문준석	송미승
이춘자	엄선덕	권윤집	신규상	정순천	김응배	송재근	장형근	김대근	민경준	송영종
이희재	오미애	권휘동	신영섭	정은숙	김인철	신창호	장화식	김명숙	민찬홍	송진호
임구원	오인순	김대식	심병철	정창길	김재경	신현진	전영춘	김명진	박광배	송하철
장순환	오흥미	김도영	안영석	정태완	김재석	신희권	전혁구	김명철	박근영	송홍범
정경조	유영록	김도한	안정향	조락현	김정기	신희영	정상희	김문재	박금자	송희진
조용석	윤명자	김동석	안화석	조방희	김종구	안광정	정예성	김미주	박나영	신관용
조은정	이금순	김동일	양대환	조인지	김종기	안남주	정우택	김민성	박병철	신우기
조재용	이기형	김명수	엄봉훈	조정학	김종천	안병진	정인구	김민희	박석일	신재범
차숙희	이두열	김명혜	엄인용	조찬호	김종하	안영찬	정진숙	김보현	박성권	신주환
최경용	이부형	김무중	여은상	조창래	김주홍	안재준	정현재	김상원	박성일	심재경
최종식	이선주	김문한	여택동	진성학	김진숙	안종대	정희대	김선미	박성진	안영하
하은호	이재홍	김민석	유성호	차진근	김진중	안종훈	조성천	김선실	박세훈	양명희
한성수	이정규	김상진	유영환	채오길	김춘길	오상철	조용석	김선홍	박소영	양승희
호희국	이정수	김석태	유양근	최우곡	김충신	오세윤	조윤제	김상철	박승춘	양영주
황윤경	이정수	김선희	윤태우	최원아	김태현	오원관	조철휘	김소미	박순옥	양진영
	이중기	김수원	윤현식	최종만	김태형	오종섭	조항범	김수경	박승채	양판승
김포경실련	이중준	김영모	윤홍식	최준호	김태호	오학석	조혜형	김승호	박승옥	어성준
(주)신원렌터카	이중재	김용철	이노수	최한석	김태훈	우금옥	진동규	김신규	박영용	오승주
주식회사인원대	정일환	김윤호	이덕우	하경태	김현하	원용철	진동섭	김영삼	박용묵	오창택
	강명자	정희상	김재범	이도현	하순화	김형태	유병한	김영태	박인용	오정수
	김남규	조승현	김중웅	이미정	하중호	김혜천	유인규	최경호	김영환	오정준
	김두관	조용문	김지현	이병화	한상우	김홍숙	육종근	최경훈	김예영	박정석
	김문경	조용식	김진숙	이상천	한상인	도남선	윤석원	최봉문	김용수	박정희
	김미자	조종석	김진호	이상필	홍희청	명을식	윤여진	최성구	김정민	박종두
	김영로	채신덕	김창수	이상화	황광석	문경재	윤주병	최정환	김정아	박종석
	김영현	최일환	김창완	이선혜	황귀선	박경오	윤태희	최정우	김정용	박종철
	김옥순	최재용	김천일	이연재		박근영	이건희	한경이	김종숙	박주이
	김종열	한성식	김태우	이장수	대전경실련	박기남	이계자	한성림	김종익	박준형
	김진희	한재혁	남운환	이재민	강태현	박상훈	이광자	한정화	김종호	박찬수
	김창집	한해경	남인철	이중경	고제열	박성진	이광진	한화교	김창모	박창수
	김철경	허우섭	노영희	이진태	곽영교	박용직	이문지	황의달	김창세	박창윤
	김형창	홍석만	류학곤	이진현	구남혁	박종대	이병승		김창하	박철수
	나기천	홍성도	맹일영	이진희	권철명	박종석	이승용	목포경실련	김춘길	박한호
	남기후	황인문	문효상	이창용	김건희	박준혁	이영수	강병국	김대중	박해령
	도현순	황인순	박병주	이태용	김기수	박태호	이용훈	강병조	김태현	박혁진
	류문식		박병준	이해숙	김기오	박희조	이인세	강성태	김하성	박현희
	문태식	대구경실련	박종철	이형태	김대석	방명덕	이재영	강영태	김하현	박혜영
	박경자	에스제이건설(주)	배기재	장영규	김동선	배동국	이정규	강제석	김홍석	박홍식
	박병돈	강연환	변부형	장은숙	김문교	백미옥	이정호	강주천	김희환	배근미
	박영훈	강호욱	서정옥	장호경	김문영	백정웅	이종범	곽경배	나지애	배상기
	백종일	경희창	서종철	장호열	김병국	서한형	이지영	권인철	노경윤	배영철
	신명순	공영선	성광기	전상훈	김상환	서형호	이철은	김경옥	명근홍	백재봉
	신순철	곽덕환	성윤상	전영평	김영기	서희경	이학재	김경철	모청용	백정심
	심상용	곽성기	손광락	전재호	김영주	성기석	이현대	김관옥	문연철	서미화
	안재범	권기억	손상훈	정경선	김영희	손대근	이현호	김광배	문영덕	서이체

이현중	최현철	경규성	김복준	김인한	김혜연	박시우	서수금	신영호	우명자	이상구
이형오	최호길	고명석	김봉국	김인환	김호범	박연수	서양수	신용현	우성철	이상미
이홍성	최홍림	고인홍	김봉규	김장섭	김홍재	박영봉	서종석	신유천	우정용	이상백
이홍식	최환석	고재일	김봉수	김재만	김홍휘	박용주	서창근	신임균	원상순	이상은
임일용	최 훈	고정연	김부근	김재명	김훈태	박용한	서현수	신정희	원 허	이상진
임종석	하상복	공병승	김분이	김재일	남경태	박윤기	서현식	신철성	원희연	이상득
장 미	한건준	곽수현	김삼문	김재찬	남기찬	박재분	석승희	신총기	유상일	이석주
장은경	한상효	곽원병	김상길	김재훈	남영현	박재우	석진열	신해경	유수윤	이선희
장종국	한승주	구경희	김상배	김정각	노경조	박재욱	석태호	신항님	유영명	이성권
전종국	한승현	구명종	김상욱	김정량	노상훈	박재현	선석렬	신현무	유완식	이성렬
전철균	한태연	구주영	김상호	김정수	노영욱	박재홍	설광석	신해숙	유재엽	이성림
전철영	홍건숙	구효송	김석준	김정숙	노일용	박정숙	설동경	심미예	유재중	이성열
정남준	홍극선	권명섭	김석준	김정순	도한영	박종덕	설호석	심상조	유정동	이성훈
정영오	홍근표	권범현	김석호	김정택	류강렬	박종석	성덕주	심성구	유재현	이성희
정병수	홍석준	권수범	김선년	김정현	류위훈	박종수	성민수	심윤정	윤강훈	이세형
정삼수	홍순길	권오성	김선미	김종구	류종성	박준순	성병창	심인실	윤나영	이순정
정석우	홍진표	권오혁	김선희	김종기	류진호	박준홍	성영미	심재천	윤남열	이승호
정세빈		권외분	김성권	김종민	모삼선	박진성	성영희	심형철	윤상미	이시화
정승임	부산경실련	권재현	김성근	김종우	문명순	박찬일	손병열	아영아	윤석준	이영갑
정영대	(주)경성에너지	권태섭	김성길	김종철	문재천	박철완	손봉주	안기영	윤성미	이영신
정원종	(주)부산관광호텔	길태호	김성수	김종한	민현선	박철중	손상용	안도호	윤수성	이영호
정준택	(주)씨리크정종석	김가야	김성열	김주영	박경주	박철한	손순용	안명석	윤재성	이영호
정진대	(주)트리글래스앤에스	김갑환	김성춘	김주현	박관수	박태주	손영일	안문상	윤재철	이영훈
정평국	강경태	김경숙	김성태	김주호	박길호	박한규	손정현	안성관	윤정선	이욱형
정해수	강규성	김경일	김성호	김주희	박남희	박현욱	손정환	안원하	이갑준	이위덕
정호원	강대영	김경조	김성훈	김준기	박도영	박해정	손창욱	안재민	이강진	이은화
조기석	강미라	김경택	김세한	김준환	박동범	박홍재	손치훈	안종일	이경숙	이을찬
조미경	강민석	김경화	김수미	김진영	박동석	박희정	송문숙	양동열	이경학	이재정
조상국	강민수	김광식	김수자	김진찬	박두춘	방성애	송순임	양시경	이귀선	이정민
조순형	강민정	김광희	김순애	김진필	박명식	방욱자	송원섭	양재화	이귀순	이정식
조영교	강병석	김기진	김시현	김진현	박미순	배광효	송은주	양종철	이규현	이정주
조영석	강삼욱	김길수	김쌍우	김철도	박미영	배덕광	송재광	양종필	이남걸	이정향
조용호	강상섭	김남식	김영관	김춘덕	박민규	배성훈	송재은	양지현	이남기	이정호
조인수	강성권	김남일	김영길	김태경	박민우	배용준	송정숙	엄세원	이남중	이정환
조준범	강성태	김대래	김영길	김태구	박복용	배유한	송중두	엄호천	이덕식	이정훈
천병식	강승희	김 도	김영욱	김태우	박봉수	배종출	송희준	오병루	이도준	이조경
천재관	강시명	김동영	김영주	김태희	박상명	배혜래	신경근	오상준	이동률	이종림
천현중	강예운	김동호	김영호	김해룡	박상병	배화숙	신군재	오상환	이동원	이종원
최경아	강유창	김동환	김용섭	김현욱	박상조	백대영	신대량	오세룡	이동윤	이종철
최병기	강재현	김명석	김용원	김현재	박석원	백혜량	신동욱	오연석	이동진	이종학
최연식	강재호	김문규	김용필	김형권	박선아	변영호	신만석	오영자	이동훈	이종화
최인수	강정규	김미향	김원태	김형균	박성수	부두봉	신병훈	오철조	이동희	이주환
최인권	강주하	김백철	김유경	김형수	박성철	서경국	신상구	오태석	이만수	이준승
최 일	강중득	김범준	김유리	김형천	박성호	서명대	신상해	육성애	이명식	이진수
최재경	강태문	김병곤	김유석	김형철	박성훈	서명립	신성진	육진우	이명진	이창희
최중명	강필원	김병용	김윤영	김혜경	박승갑	서무건	신수진	왕 인	이미경	이청재
최치영	강현주	김병하	김은숙	김혜경	박승제	서봉원	신승균	우도균	이병호	이춘구



이춘성	정동영	조용언	최용흠	강신길	김영식	박문수	양언석	이영선	조현국	강연희	김중오	변영선	이성호	정태정	강철호	김영희	박준연	이용진	강대우	신상돈	최경호	
이학봉	정명길	조용우	최원석	강영희	김영호	박병훈	양영희	이영순	주영래	강유정	김준혁	서경희	이성희	정희석	김미정	김미경	박창수	이용천	강병국	신순봉	최석운	
이현제	정문수	조용한	최은석	고석철	김영화	박성진	양진옥	이우영	진형배	강인선	김지란	서상범	이수행	조경두	김선명	김민	박태순	이정아	강신우	신희정	최성규	
이현주	정미경	조용현	최은주	고선창	김원기	박성한	양해준	이운연	천성미	강희정	김진순	서수정	이승호	조규만	김성준	김병재	박해부	이주옥	고승일	안경모	최영식	
이혜영	정미영	조유장	최인한	고영진	김원일	박수경	어주하	이재선	천성필	강희진	김철한	서 환	이영주	조규호	김준호	김상혁	박은경	이창수	구민진	안영일	최영준	
이훈전	정미한	조윤희	최재명	고인선	김유경	박승민	엄경선	이재정	최근석	고병익	김철관	서홍석	이용호	조금현	김지훈	김성봉	서정열	이회대	김경희	여병찬	최 탁	
이희길	정민재	조유제	최재호	고종문	김은중	박영덕	엄천수	이재홍	최길순	공민지	김해영	성현구	이운창	조미경	김필래	김안식	서혜경	이희연	김광배	여현정	하보균	
임무진	정상문	조유환	최정묵	고현주	김은희	박영미	엄태영	이정하	최돈환	구본숙	김현구	손형주	이원옥	조병모	나창수	김영숙	석진성	임명자	김광윤	염 총	한상룡	
임용관	정순영	조은아	최종해	공정관	김인섭	박영희	오관영	이중섭	최동권	구자돈	김현태	송금옥	이원재	조석환	박재현	김영희	성준모	임수정	김대우	오기형	허여령	
임우택	정순일	조재형	최철원	곽병용	김일환	박용기	오광택	이중식	최서호	권윤희	김해련	송기진	이윤희	조승백	박제성	김윤재	손상경	장기준	김동운	오성탁	홍성현	
임중수	정신모	조지혜	최해경	곽종환	김재학	박정민	오모현	이중식	최승영	권후남	김해숙	송원찬	이의봉	조재경	서용현	김윤희	신광재	장동근	김동현	유병주	홍순성	
임 호	정애니	조지희	최희원	곽현욱	김정식	박종학	오승택	이중길	최애리	김경수	김회웅	신동섭	이재교	조형훈	오정록	김은주	신남균	장동일	김명숙	유영표	홍승희	
장경식	정영점	조철현	탁영민	권종식	김정아	박종현	오윤택	이진어	최영미	김경호	나민수	신복용	이재득	조화윤	위미영	김재동	신동국	전준호	김명주	윤수영	황규영	
장귀봉	정용성	조현수	하경민	길 목	김정인	박종훈	오홍월	이진형	최용석	김대성	나태성	신한미	이재우	주영훈	윤형신	김종길	신병철	정승현	김민섭	윤종대		
장규환	정용수	조홍규	하나연	김 철	김정훈	박희식	원선목	이 철	최유정	김도형	남기석	심재광	이정원	지순이	이금호	김지영	신윤관	정안철	김선자	이강식	여수경실련	
장금구	정우루	홍은데이	하상철	김 철	김종윤	방대식	원은주	이필순	최종현	김동규	남상덕	심원자	이정하	진송주	이복남	김지훈	신장환	정연주	김수은	이동준	강성훈	
장동범	정은선	좌정훈	하소영	김강석	김주란	변성수	유성봉	이호석	최지문	김동석	남창현	안혜영	이종령	최문태	이상현	김창모	신청하	정용기	김양수	이명규	강용원	
장문숙	정은주	주수현	하순금	김경석	김주철	변인미	유영민	임덕수	최진철	김동선	남택진	양우혁	이중주	최승주	이상휘	김창하	심규호	정은수	김영범	이상건	고용국	
장문정	정재동	주안나	하정수	김경순	김준섭	서관우	유영창	임정길	최춘파	김동원	노선희	양재철	이주연	최영숙	이욱기	김철진	양근서	정은식	김용란	이상수	고용진	
장봉주	정재호	주재인	하주수	김경아	김지혜	서영기	유종완	임종희	최택수	김말순	명홍진	양진하	이주현	최영옥	이찬오	김초환	양태호	정은혜	김용준	이수진	공성식	
장성호	정중학	지경아	한기성	김계남	김진태	서은진	유주희	장경민	최형덕	김미옥	모성은	예인기	이진성	최영희	이휴정	김춘호	양현석	정이진	김의도	이승용	곽현철	
장세규	정중화	지은아	한미영	김기춘	김진희	소문섭	윤규식	장영석	최호섭	김미정	문순심	오세환	이찬용	최인수	장동식	김태훈	오관영	정정순	김일구	이연환	권인홍	
장영철	정지원	진상표	한병무	김기춘	김진희	소문섭	윤규식	장영석	최호섭	김미정	문순심	오세환	이찬용	최인수	장동식	김태훈	오관영	정정순	김일구	이연환	권인홍	
장윤석	정진교	진수진	한병철	김남춘	김진희	손병섭	윤기순	장성원	추중권	김민수	박승현	오일용	이창진	최진학	정은희	김현삼	오은석	정진욱	김주남	이용열	김동채	
장은선	정창성	차동박	한성국	김덕용	김천수	손재복	윤신남	장은선	탁동철	김민수	박동선	오지현	이판수	최진환	주지은	김현호	오정순	정철욱	김중기	이의협	김미순	
장재구	정창화	차동욱	한성안	김동수	김철수	송경희	윤재훈	장재환	고성관	김민혁	박민철	오해경	이필근	하순진	한지은	김형욱	오진호	제종길	김진영	이제두	김성춘	
장준흠	정춘희	차진구	한영수	김동순	김철환	송명근	윤재희	장주열	전순득	김백규	박승원	우양미	이필훈	하은미	홍상우	김혜숙	오현주	조경래	김창환	이종문	김숙자	
장지태	정치금	채종현	한재철	김말순	김춘삼	송은희	윤정은	전이령	하성란	김석규	박영양	유병욱	이해균	한경수	안산경실련	김호득	원미정	조충현	김현진	이홍록	김유성	
장해욱	정패영	천상수	허진욱	김명섭	김충남	송재철	윤 준	정병호	한실림	김석진	박원호	유상철	이현순	한곡지	안산경실련	김호득	원미정	조충현	김현진	이홍록	김유성	
장희정	정하윤	천용욱	허해녕	김문석	김태균	송종철	이건욱	정봉재	한상민	김성란	박윤희	유재성	이호주	한상울	강기성	김화궁	유명희	주만수	김후승	이희연	김종구	
전명숙	정한성	천정호	허현도	김미경	김태영	신대섭	이검호	정성근	한성희	김성연	박은호	유재상	이희수	한옥자	강수문	나정숙	윤상민	최경숙	노국환	임다정	김충규	
전보익	정해균	최가훈	현지훈	김미녀	김형걸	신선익	이경상	정순희	한정숙	김시영	박정화	윤귀현	이희숙	한창균	강수진	남기순	윤성웅	최복수	맹주철	임승기	김현태	
전세표	정해영	최경윤	홍봉선	김미정	김형기	신영근	이경애	정양언	한국기	김안식	박제현	윤남권	임혜경	한홍교	경창수	남승하	이갑순	최영화	문화정	장석준	나형선	
전연숙	정환중	최규덕	홍일표	김병욱	김호준	신재민	이기원	정용주	한준식	김영기	박주영	윤두천	장래인	허성균	고미나	남정애	이강숙	최윤정	박민기	장영달	문봉호	
전용배	제희문	최남연	홍종인	김부석	남상진	신종출	이대복	정원모	허우린	김영래	박준배	윤희경	장명욱	허윤화	고영인	도원중	이경란	최은재	박상혁	전미옥	문상엽	
전일수	조경태	최달웅	황국자	김상기	노금희	신창승	이돈섭	정윤희	홍명관	김영수	박진순	이경섭	장점오	허재구	곽태영	류영숙	이경석	최임이	박수원	전재현	민응기	
전정표	조래영	최민식	황보승희	김선일	노철호	신창현	이동균	정은솔	홍인숙	김영태	박태경	이국희	장진욱	허현태	권태근	문연숙	이근미	최채림	박은정	정경숙	박병규	
전정호	조명래	최병근	황영식	김성권	동병희	신현식	이문성	정은희	홍천희	김원동	박현웅	이근호	장현주	홍영호	김경미	박경용	이미숙	최현수	방민경	정연준	박상신	
전진영	조명제	최병찬	황인구	김성근	라용일	신홍사	이미경	정진수	홍천동	김용로	박형순	이금희	전희락	홍종수	김경숙	박경중	이미숙	하혜경	배만병	정영수	박성현	
전현수	조문선	최보규		김성욱	문재용	심연흠	이병선	정진용	황보해용	김용철	박화진	이기흥	정계화	황민식	김경욱	박경태	이민근	한미현	배연정	정주영	박숙희	
전호열	조봉수	최부환	속초경실련	김수근	민현정	심윤자	이봉진	성호원	황시영	김 응	박홍덕	이명욱	정민자	황성우	김기범	박기욱	이병욱	현유경	서동일	정하성	박영근	
정권영	조상희	최선아	(주)강원으로	김수정	박경미	안경민	이상식	정홍기	황영희	김인석	방중복	이문근	정성균	황용원	김기희	박동신	이상현	형천호	서시은	조춘선	박효준	
정근	조성렬	최성관	통일자동차공업사	김순복	박경심	안경수	이상정	조광덕	황은숙	김재기	배금란	이민구	정순혜	황지숙	김대영	박상근	이선희	홍창표	서영균	조현주	배선주	
정기섭	조실제	최수미	평화산업	김순봉	박계화	안경자	이상호	조명수		김재성	배창수	이병로	정양훈		김대일	박은호	이숙경	황연화	서진숙	진량규	서영남	
정달식	조양래	최수영	강동우	김승철	박근철	안세준	이수영	조선휘	수원경실련	김정희	백혜련	이상명	정원제	순천경실련	김동인	박종숙	이숙란		성종규	채종묵	서종원	
정도영	조영규	최승환	강미심	김시형	박덕희	안종석	이승재	조성열	(주)청영건설	김종석	변수정	이상해	정자홍	황인용신경과의원	김명연	박종호	이신정	양평경실련	송명원	최갑주	서호영	
정동만	조용규	최영주	강석태	김영석	박명중	안종원	이언우	조성진	강민철	김종선												



성수미	고성현	김상실	김정진	문연래	변영구	양재란	윤수영	이영섭	이현희	정유리
손동혁	고옥자	김상훈	김정진	민승래	변정해	양정분	윤준호	이영우	이호돌	정윤지
송승하	고윤지	김선우	김정천	박경룡	변정해	양희진	윤태범	이영현	이호영	정윤희
심경택	고인정	김선일	김정희	박경미	부태길	어경숙	윤태범	이영훈	이호일	정은영
심재수	공미선	김선희	김종복	박기환	빈종진	어덕경	윤향숙	이옥희	이후재	정은희
안성용	구경혜	김선희	김종원	박영순	빈종진	엄기홍	윤혜숙	이용근	이 훈	정인우
오경섭	구준모	김성국	김주생	박명철	서성원	엄주연	윤희동	이용만	이희상	정일구
오상경	권광일	김성국	김진수	박병건	서원교	엄태희	윤희태	이용연	임명원	정진용
오승석	권순원	김성길	김진수	박병대	서은숙	엄희용	은종원	이우정	임상열	정진학
윤정희	권순원	김성애	김진숙	박상옥	서재호	여재혁	이강문	이운용	임상열	정춘화
윤주현	권영미	김성완	김진숙	박상용	서정순	여한수	이강수	이윤숙	임선미	정하근
윤현희	권영진	김성재	김진영	박상임	서희숙	오근철	이경수	이은상	임성규	정혜순
이문식	권영훈	김세동	김진용	박상철	성주영	오금석	이경수	이은상	임성식	제영기
이 식	권오섭	김수동	김진창	박선규	성희연	오동석	이경호	이은자	임성한	조경국
이영재	권오주	김숙현	김진천	박선영	손경자	오명환	이경화	이의성	임영길	조계만
이종원	권진형	김순업	김진천	박성희	송경은	오병재	이광석	이익재	임은혁	조길문
이 철	권혁봉	김순업	김창균	박수자	송영득	오석호	이광세	이재범	임자희	조남술
이평호	권혁왕	김승민	김창수	박양래	송영득	오성순	이광윤	이재성	임철만	조병든
임호상	권혁중	김연희	김춘자	박옥선	송은주	오성용	이광재	이재용	임철순	조성복
장준배	금청하	김영근	김태진	박 인	송이식	오세린	이광호	이재학	임철재	조성숙
정대훈	기보중	김영대	김학경	박인오	송정호	오형선	이교관	이정길	임현권	조연숙
정 민	김 준	김영은	김학재	박일엽	송준규	우근배	이구현	이정숙	임혁빈	조용윌
정승환	김갑용	김영은	김현미	박재선	신계영	우순애	이기훈	이정숙	임희욱	조은미
정은자	김경산	김영자	김현숙	박재우	신덕선	우순희	이길수	이정형	장경자	조정래
정정식	김경건	김영자	김형식	박전희	신동신	우종만	이길윤	이종송	장교환	조정숙
정주현	김경률	김영준	김형진	박전희	신동윤	우현너	이길윤	이종원	장동찬	조종성
정차섭	김경림	김영찬	김호열	박정하	신동천	원경희	이명신	이종한	장여진	조철현
정치훈	김경중	김영철	김홍태	박정화	신두임	원용자	이미희	이주윤	장영란	조춘순
제성명	김경화	김영춘	남기태	박종구	신영호	원종수	이박우	이준호	장왕영	조택선
제윤경	김경희	김예론	남요철	박종오	신완재	원종순	이백선	이중재	장원섭	조택선
조현혁	김광수	김옥자	남요철	박종옥	신은순	유경윤	이복수	이진관	장원주	조한영
채홍섭	김광수	김왕곤	남용대	박준모	신종옥	유상열	이부경	이진혁	장재훈	조휘명
천상국	김광식	김용태	남천우	박창근	신종옥	유상희	이상년	이찬우	전미숙	주상운
최서규	김광인	김우재	노필순	박창근	신종화	유승열	이상원	이창규	전상진	주상운
한병세	김금녀	김윤경	노필원	박창렬	신철승	유연태	이상은	이창수	전성호	주진규
한재욱	김기석	김용제	류고윤	박대문	심관보	유영숙	이상태	이창수	전영석	지소연
한해광	김기열	김은이	류시근	박대문	심규대	유원문	이상혁	이천수	전영애	지응구
홍춘식	김기은	김은하	류종관	박형국	심형모	유재경	이석환	이철희	전외수	지정철
	김기태	김의섭	마상호	박홍재	안미숙	유재춘	이 선	이춘석	전홍구	지효숙
이천여주경실련	김길홍	김인기	마석홍	박희자	안병운	유태우	이선정	이충일	정계화	진선중
강경모	김대륙	김재순	마석홍	박희자	안봉섭	유학선	이성규	이충환	정병관	진용상
강승균	김대축	김재임	마세진	반기숙	안신실	유혜란	이성훈	이판용	정선옥	진재원
강식근	김두환	김재홍	마애진	배경희	안재영	윤광석	이순창	이학수	정성기	차동환
강신욱	김만식	김정범	목현실	배재준	안정민	윤남선	이승남	이한표	정순현	차준은
강영애	김미혜	김정분	문미자	배정수	안창호	윤남용	이승현	이해철	정순수	채홍철
강정순	김병수	김정수	문석기	배종열	안철한	윤미애	이양순	이현정	정용희	천기영
강창영	김봉덕	김정옥	문승옥	백응기	안형동	윤수영	이영구	이현호	정욱형	천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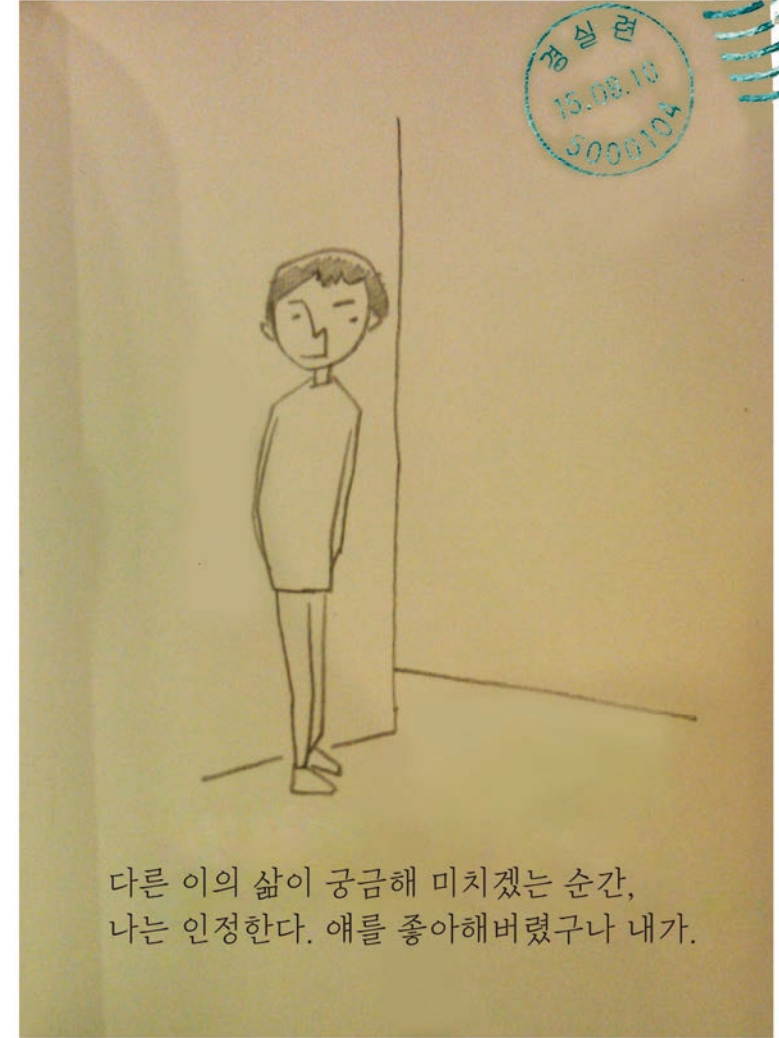
천재영	한인경	강태경	김승남	도지성	송창섭	이상동	정규식	최윤지	김정호	한재덕
최광식	한재수	고덕봉	김승희	류경홍	송한철	이상영	정기호	최인용	김종원	황병해
최근우	한정민	고재성	김연옥	류병희	신나영	이상진	정낙식	최정자	김주희	황선주
최낙수	한정현	고정규	김연중	류제홍	신영은	이상훈	정두용	최정철	김진성	
최대규	한준학	구자길	김영구	명선목	신은철	이상한	정미경	최준혁	김판용	정용경실련
최동규	한준호	권경자	김영국	문상범	신종화	이수명	정석환	최찬용	김혁수	고남용
최두열	한준희	권남구	김영수	민근홍	심정순	이애경	정선오	최 현	노병문	김용철
최명섭	한희자	권대현	김영준	민동식	안동찬	이연숙	정승권	최화영	박규만	김택술
최명옥	함수경	권미정	김옥산	민태운	안병준	이용우	정승연	최효숙	박명수	김 현
최병률	함연자	권오경	김용미	박기욱	안희섭	이은정	정연중	한기남	박명진	박래수
최병탁	허 림	권정호	김우경	박상필	양희석	이의재	정원경	한대수	박양림	박영민
최복순	허병석	권정호	김원화	박상희	엄연주	이일희	정은식	한두현	박효민	송민수
최상동	허수행	김경원	김윤태	박성은	여승철	이재필	정재영	한만송	송약용	유사현
최상원	허임범	김계원	김은경	박성인	여정주	이재훈	정지은	함지현	안수현	이성실
최옥명	허임범	김계원	김은영	박수영	오경환	이정림	정진수	함창학	안영미	이원직
최용철	허준환	김관호	김은희	박옥희	오병집	이정윤	정진오	허도병	안정훈	임영관
최은실	현수섭	김광업	김응철	박용해	오원선	이종일	정창훈	허선규	엄상섭	
최인근	홍경아	김광호	김의자	박정훈	우수홍	이주영	정태원	허수범	오상현	제주경실련
최인식	홍성동	김균률	김인수	박준용	유동현	이주희	정항진	허우범	유창엽	강경희
최재화	홍연표	김근수	김재경	박진석	유정은	이준한	정훈고	허창희	윤철웅	강금중
최정관	홍은하	김기범	김재식	박찬대	유진성	이중량	정희윤	홍옥표	윤태영	강민정
최정화	황경애	김남돈	김종길	박한정	유홍성	이찬우	조광희	홍유나	은영주	강봉석
최 종	황규문	김대중	김종욱	박현호	윤관욱	이창숙	조동암	홍인식	이기화	강지용
최 종	황규문	김덕중	김종호	방수환	윤대기	이창훈	조용철	황석광	이민호	강창균
최종섭	황인동	김동완	김종화	방정환	윤동구	이철준	조용화	황수연	이서경	강창식
최종악	황인재	김동우	김준우	배승휘	윤영철	이한용	조지영	황용선	이승현	강태운
최주옥	황현숙	김동호	김지혜	배철현	윤미경	이행숙	조현준	황제우	이 정	고광희
최춘봉		김두영	김진영	백동수	윤지희	이현경	조희선		이현희	고관만
최현숙	인천경실련	김명석	김진희	백민섭	윤 호	이형구	주영선	전주경실련	임명진	고내수
최현희	(주)진영이엔지-최준옥	김명제	김창문	변성준	윤희택	이형수	지영일	강원균	임성진	고동철
허맹수	(주)한성리인	김미아	김창우	서경옥	이강훈	이희광	진혁화	강호수	전기환	고맹호
허태길	(주)다큐엑스	김미현	김태호	서부길	이귀복	이희숙	차광운	곽이구	정구영	고보선
허현홍	인천북합운송협회	김병우	김태훈	서용성	이기원	임강민	차득기	곽홍규	정세윤	고봉석
한덕이	사단법인무지개	김병철	김하운	서주선	이기태	임승관	최경훈	김관성	정연택	고봉수
한덕이	도영운수(주)	김봉수	김현식	서태원	이길성	임재훈	최광용	김대기	정인호	고상봉
한돈집	강대준	김상길	나영우	서해동	이다빈	임현준	최광은	김만식	정태원	고성봉
한만준	강덕우	김상섭	나종팔	서해안	이덕환	임희숙	최금행	김병석	조선환	고승한
한상화	강영선	김상열	나종훈	석 일	이도희	장영현	최두영	김삼덕	조찬환	고영미
한상화	강명수	김상우	남세중	성기건	이동기	장일진	최병길	김세민	지은숙	고영빈
한순택	강상근	김선홍	남종희	성덕규	이동현	장정민	최병윤	김수환	진정현	고영수
한연숙	강 석	김 설	남지승	손장원	이루다	전동춘	최상희	김여진	채규현	고영식
한영순	강석철	김성근	남창섭	송경희	이린우	전영우	최서희	김용권	최문희	고재우
한영옥	강선옥	김성수	남홍우	송문성	이문의	전용성	최성원	김용휘	최종렬	고재일
한은상	강옥엽	김세훈	노국진	송원덕	이범열	전우진	최수진	김윤애	최진희	고정윤
한은상	강정호	김수만	노승환	송인선	이병철	전준권	최순자	김정길	허덕철	고정훈



고태식	박정용	현종철	장석운	류임상	정미주	강민오	김두호	김용석	김필재	박공규
고행곤	박중규	현창석	정운태	류지현	정병인	강석형	김말숙	김용승	김학민	박관주
기태선	변성언	홍성화	제재영	맹창호	정운양	강성래	김명배	김용규	김학실	박구원
김강문	변정철	홍순민	조양래	명진아	정윤세	강승범	김명수	김유미	김현상	박근수
김경용	부상원	홍용의	주성주	박인숙	정재교	강영미	김명자	김유호	김현숙	박근수
김관식	부윤삼		최원배	박순환	정치화	강은희	김문옥	김윤모	김현숙	박기번
김광섭	송대영	창원경실련	최재형	박종갑	정하진	강진성	김미라	김은옥	김현주	박기환
김기훈	송석언		강권식	최정현	박종래	조강석	강현구	김미숙	김응일	박남순
김남혁	안영철		강동석	최팔호	박종복	조영주	강호문	김미숙	김인숙	김형창
김대호	양문석		강수근	허영기	박태서	조인순	강호승	김미희	김일경	박동규
김동욱	양문종		강태욱	허효창	박현희	조하심	경준용	김민호	김일수	김홍구
김동진	양봉석		권대용		방재환	조호익	고금순	김백규	김재복	김홍성
김동훈	양성국	권재길	천안아산경실련	송용관	주홍종	고영구	김병우	김재연	김환국	박범혁
김명준	양시경	김성욱	강민숙	신통현	차준희	고영재	김병의	김재원	김형래	박석현
김봉석	양우선	김정한	강인영	양소조	최경식	곽규은	김병철	김재종	김희수	박선현
김봉철	양진웅	김종삼	강태윤	오관식	최경영	곽승호	김봉술	김재학	김희식	박성호
김봉희	오승용	김종운	강필호	오수균	최석남	곽창록	김봉주	김재형	김희정	박세웅
김부찬	오영익	김진철	강희두	오승화	최석림	구남휘	김상무	김정문	나동현	박연수
김상우	오영환	김치득	고병현	오안철	최신수	구안서	김상수	김정미	나채경	박영미
김 석	오정훈	김치영	고영술	우승윤	최창환	권기승	김선희	김정승	남대우	박영순
김석범	오창현	김형석	구분영	유병국	하종률	권미경	김성수	김정웅	남성욱	박용석
김성수	유덕현	나선애	구자형	유진영	한광수	권성안	김성천	김정일	남성욱	박용연
김성준	유두석	나태연	금명기	윤건호	한문식	권수복	김송일	김정초	남중순	박익규
김세검	윤영부	남정호	김경은	윤권중	허 영	권영기	김수열	김정태	노근호	박인규
김수남	윤영환	도춘석	김기태	윤미숙	허종일	권오건	김숙자	김중구	노영민	박인숙
김수연	이숙희	문지영	김길년	윤일규	황종현	권태성	김소영	김중기	노재량	박인자
김승필	이용민	박기문	김동욱	윤정섭	황천순	권희상	김순천	김중칠	도선봉	박재경
김승훈	이정민	박지영	김미경	이경숙		김갑용	김승호	김종태	류규식	박재관
김양보	이태운	박혜진	김미경	이경주	청주경실련	김강일	김안식	김주복	류근모	박재익
김영희	임숙자	서정열	김미수	이영근	(주)대한프리콜링청주지사	김건도	김양식	김주환	류근운	박종관
김용범	장원석	서정호	김민수	이병덕	(주)명성엔지니어링	김경자	김연식	김준경	류덕환	박종률
김원규	정상철	송태종	김봉미	이상일	(주)세일	김경호	김영근	김준기	류연욱	박종률
김원삼	정선태	예규현	김상관	이상춘	공공디자인이즘	김계욱	김영란	김준년	류우열	박종서
김익태	조남섭	오순덕	김세곤	이서영	네모토 마사프구	김광남	김영미	김준수	류재형	박종선
김인영	조문수	오희석	김용진	이선열	대신장기회복지동체(주)	김광렬	김영민	김준태	류재호	박종순
김정수	조시중	윤선한	김종문	이수현	대정건설(주)	김광복	김영배	김진철	류진호	박종천
김지연	좌광일	윤종도	김진태	이승렬	두개비마을신문	김광수	김영욱	김진호	류학천	박종태
김창기	한남석	이민우	김철수	이인범	리드산업개발(주)	김광직	김영재	김창한	류현숙	박종혁
김창순	한영조	이성호	김태영	이종욱	법무법인 주성	김광희	김영진	김찬식	맹석주	박종희
김창연	한용환	이영길	김행조	이종필	서울고속(주)	김교선	김영태	김 철	맹현숙	박주호
김철수	한재철	이영희	김혜영	이철호	신일전기공업(주)	김규설	김영호	김춘희	명정희	박진우
김형진	한정훈	이이형	김홍원	장기수	씨투넷(주)	김규원	김영환	김태봉	문성오	박찬병
박만용	한철호	이재관	김홍철	장명수	에듀크리안트	김대중	김영환	김태성	민경억	박철규
박성연	현경수	이재철	나이란	장원철	청주생협중앙회(주)	김동암	김영희	김태완	민경자	박철석
박승훈	현경호	이지영	남명희	장재식	청주성안길생협개성인회	김동욱	김용국	김태인	민승기	박춘섭
박시환	현영철	이흥기	노덕우	전종환	강대성	김동일	김용덕	김태형	민준형	박해덕
박오범	현웅택	임태진	노순식	정미영	강 민	김동진	김용덕	김태희	민청식	박행자

박효표	송재경	연방희	윤승현	이순남	이철희	정총원	조동순	최태호	김남철	이관행
박희분	송찬주	연영규	윤정수	이순철	이한훈	전관호	조상현	최현숙	김대영	이복연
반영운	송태성	연영태	윤정숙	이순호	이해승	전년규	조성구	최형도	김범철	이상섭
반주현	송필수	연철흠	윤찬열	이승배	이항미	전병선	조성오	최호균	김석중	이상철
배관희	송해근	연호석	윤태한	이승준	이현수	전세식	조수종	표한홍	김선배	이석원
배병기	신경운	염봉순	윤한식	이승철	이현수	전용렬	조승연	풍경섭	김승현	이승준
배상은	신국희	오국진	윤혜정	이애자	이현식	전용표	조원영	허옥란	김용재	이원규
배응환	신규식	오명진	윤호영	이양우	이현주	전우석	조용숙	허재성	김정현	이은영
배중서	신동선	오석송	이경순	이연옥	이형각	전창해	조운기	한기억	김종식	이인배
백선형	신영섭	오연경	이경희	이영숙	이형우	전희택	조윤행	한상화	김평안	이인섭
백승협	신영수	오영미	이광용	이영진	이형찬	정교순	조은애	한수환	김한택	이종민
변광섭	신영자	오영애	이광희	이영희	이형택	정 규	조을선	한은레	김해경	임재선
변길주	신범식	오영필	이귀형	이예원	이화련	정란희	조이현	한익돈	김희성	전규호
변민수	신성일	오창민	이규선	이옥규	이효숙	정미화	조정식	한인섭	남형우	전근우
변상태	신승수	오태진	이규호	이옥인	임건철	정병숙	조항진	한정현	박경철	전동준
변성호	신승주	우상동	이근식	이윤범	임규찬	정상섭	조형규	한진석	박대진	전만식
변성민	신승진	우장영	이기만	이은희	임근수	정상신	조혜경	허석렬	박도수	전성휘
변은영	신영구	우정순	이기정	이인규	임기수	정상욱	주서택	허성만	박미현	전양호
변의수	신영희	원광희	이동로	이인우	임기중	정상완	주성규	허 영	박상규	전문성
변장섭	신옥희	유광식	이두영	이일만	임동현	정상용	주재구	허장권	박상렬	전호성
불원진	신용재	유근수	이만형	이일우	임병락	정성희	주재현	현상주	박정근	정의성
부찬희	신철영	유민상	이맹원	이장희	임성진	정세용	지동규	현 진	박형일	정지만
서길용	신창호	유선우	이명관	이재덕	임성총	정승희	지 민	형미희	방명열	정종교
서대석	신태경	유성훈	이명순	이재영	임용수	정연숙	지상오	홍강희	방수미	조성모
서완석	신패희	유순영	이명호	이재영	임용현	정영래	지의경	홍경선	배은숙	조성자
서용원	신헌식	유영경	이명훈	이재원	임은정	정영섭	지현성	홍명근	변용환	진장철
서우석	신희숙	유영숙	이미경	이재은	임의순	정영희	진경수	홍석원	변차용	최영진
서준철	심규석	유영아	이미화	이재춘	임일수	정우영	채명순	홍성학	석영기	최희수
서효석	심상학	유인봉	이민영	이정규	임재경	정은희	채희관	홍성학	손헌기	하상준
석영용	심수영	유일수	이범구	이정석	임재규	정인수	최각규	홍승표	손홍주	한광수
석 준	심영미	유재일	이범석	이정수	임재일	정일기	최경호	홍우표	송창근	한희민
선종렬	안병대	유주하	이병관	이종섭	임중승	정일택	최계원	홍응표	신길호	함대성
설경철	안성호	유채연	이병권	이종섭	임지은	정재량	최광민	황경수	신선철	함형주
성기남	안영숙	유철호	이병호	이종수	임차남	정정필	최대철	황규혁	신혜숙	황덕호
성주우	안창현	유행렬	이복순	이종실	임한빈	정지성	최맹섭	황동훈	안봉진	황해숙
성현용	안재홍	유현덕	이상규	이종윤	임한수	정 진	최상영	황락훈	안호춘	
손세원	안창만	유현철	이상복	이종한	임한경	정진아	최상희	황선건	양태식	포항경실련
손윤희	안치석	육미선	이상식	이주봉	임혜숙	정진원	최성희	황성주	오동환	포항제철의학병원
손정훈	양계인	육종길	이상중	이주선	장경석	정진하	최승민	황영미	용성중	화일산기(주)
손효진	양기정	윤건영	이상준	이주형	장남운	정 철	최영중	황희연	용준형	강용호
손희준	양기춘	윤관수	이석희	이준수	장동대	정총선	최우식		유영호	강창성
송만호	양미선	윤기용	이선순	이중섭	장병순	정혜영	최은침	춘천경실련	유재원	공영서
송봉화	양찬섭	윤명숙	이선우	이중원	장병희	정현순	최윤정	춘천상공회의소	윤장혁	구지옥
송선호	양철호	윤병희	이성민	이중현	장선배	정희승	최은실	고대규	윤재경	권부혁
송영준	엄경출	윤상이	이수복	이중훈	장영건	조경주	최진욱	권용범	윤재선	권영준
송의천	연광석	윤서영	이수영	이지영	장재봉	조국현	최진완	김정숙	윤학로	권오일
송일근	연규용	윤석위	이수한	이철중	장호진	조규호	최충진	김광배	이경욱	권태훈

빨래수니의 '가을이면 연애를'



다른 이의 삶이 궁금해 미치겠는 순간,
나는 인정한다. 애를 좋아해버렸구나 내가.

To. 경실련 독자 여러분,
가을입니다.
모두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Good Luck!

권택석	김성예	김준태	나창호	박정환	오호창	이미나	이원탁	장현수	조동욱	편도선
김기호	김수구	김진두	남승국	박준규	우홍인	이미아	이익창	장현정	조은경	하승환
김대열	김용갑	김진순	도승표	박태승	원호연	이상구	이재학	전국중	지승익	한상복
김대영	김원우	김태석	문기영	방성호	유대철	이상민	이정미	전정렬	진기은	허태구
김동완	김은정	김태진	박광열	서동욱	유성찬	이상윤	이정훈	전해란	최동수	홍승철
김우영	김익태	김태현	박근영	서윤기	유재준	이수열	이지은	정승태	최병문	박의룡
김문규	김인랑	김태희	박문태	손종수	이경식	이수창	임미진	정은미	최윤정	황보경운
김미경	김장수	김현실	박상조	손준호	이규은	이시우	임영숙	정태문	최재봉	황보원주
김보람	김재석	김현철	박인호	안상한	이동철	이우년	장병화	정혜영	최정식	황영한
김봉만	김정수	김효성	박 일	안혜정	이동학	이욱재	장성숙	정 휘	최태열	
김상수	김정혜	나기합	박재열	양기정	이동훈	이운용	장태윤	정희철	최희수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766-9736	팀장: 윤철한, 부장: 최승섭, 간사: 윤은주
기획·총무팀	741-8566	팀장: 김한기, 부장: 채준하, 간사: 오세형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팀장: 권오인
회원·홍보팀	744-0400	팀장: 김한기, 수습간사: 황주란	(사)경실련통일협회	766-5624	간사: 홍명근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정택수, 수습간사: 방승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766-5627	팀장: 윤철한
정치사법팀	3673-2145	팀장: 김상수, 간사: 유애형, 정유림	시민권익센터	3673-2146	간사: 권태환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남은경, 수습간사: 김용석	소비자정의센터	765-9732	간사: 박지호
국제팀	766-5623	간사: 이현아, 이수련	월간 경실련	766-5629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부장: 신명자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경상권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이현호	가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간사: 박희자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강미라, 배성훈, 간사: 정애니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정책위원장: 이지영, 국장: 오정환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송연, 국장: 김선희, 팀장: 김성아	경주경실련	054-773-7851	국장: 이원희
경기·강원권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협	031-253-2265		포항경실련	054-273-0185	간사: 장현정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간사: 최미영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전라·제주권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박완기, 정책실장: 노건형, 간사: 유병욱, 정재욱	순천경실련	061-751-9993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최윤정	여수경실련	061-643-2110	집행위원장: 김 신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인순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철모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운, 간사: 변정혜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최기자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동우
양평경실련	070-8362-2147	국장: 최갑주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경아	남원경실련	063-633-6662	정책위원장: 이정수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팀장: 이경욱, 간사: 오연욱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좌광일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꺼내다

5

눈부시게 . 모든 것을 새롭게 .



S펜의 놀라운
능력을 꺼내다



SAMSUNG Galaxy Note5

견고하게 빛나는 메탈&글래스 ·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 가볍게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S펜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SAMSUNG